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0000-000833-10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0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0. 12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0/92
등록일: 2000년 12월 19 일
기증:

대한민국정부

본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음.

출	발	부	처
농	림	수	산
부	국	장	관
농	림	수	산
부	국	장	관

목 차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	3
1. 목표 및 방향	3
2.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6
3. 제2차 수산업·어촌 투융자계획	9
4.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99)	10
5.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8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정제도 개혁	22
1. 협동조합의 개혁	22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31
3. 농수산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행정규제 개혁	40
II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48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48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54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66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구축	70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79
6. 친환경농업의 육성	89
7. 농어가경영안정대책의 추진	95
8.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100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시책	104
1. 쌀산업	104
2. 채소·원예산업	108
3. 축산업	111
4. 임업	121
5. 수산업	134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39
1. 다양한 소득원 개발	139
2. 기초생활환경 개선	142
3. 교육여건 개선	146
4. 농어업인 연금제도 실시	149
5.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151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2000년도는 새천년 농업의 원년으로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농업·농촌발전계획의 틀을 마련하여 추진하면서, 농업생산기반관리기관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고 협동조합개혁을 완수하는 등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였으며 농산물유통개혁을 지속한 한해였다.

21세기 농정방향과 시책을 제시하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시행하고, 42조 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92~'98)의 성과를 바탕으로 '99~2004년간의 45조 원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유통·품질·안전성 등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금년 한해는 WTO농산물협상 개시, 한·칠레 FTA추진 및 중국의 WTO 가입 추진 등으로 「개방과 경쟁」의 영향이 더욱 피부에 와 닿으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구조면에서 토지·노동·자본이 핵심 생산요소였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기술이 핵심 생산요소로 중요시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부문에다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생명공학기술 및 자동화 기술을 생산·유통과정에 폭넓게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대내외 농정여건 변화와 그간의 농정추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농가경영안정을 추진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금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의 주요 방향과 분야별 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력분야에서는 농업인 후계자 지원을 내실화하고 가족전업농 등 농림어업 전문경영체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이들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경영·기술 컨설팅 등 효율적인 경영기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농업발전을 선도할 인력으로 신지식농업인을 발굴 육성하고, 농업정보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중 3만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고 우량농지의 전용을 지속적으로 억제하였으며, 휴경논 생산화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RPC)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계열화하여 비용절감과 미질 향상을 도모해 가고 있다.

셋째, 유통예산의 확대와 농안법 개정으로 마련된 기틀 위에서 유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수 일선조합에 유통자금을 지원하면서 채소류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고랭지 배추·감귤 등을 중심으로 유통명령제 시행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직거래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직거래장터 등을 추가 개장하였다.

넷째, 읍·면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ADSL)을 구축하여 농업·농촌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정보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해 가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의 정보 콘텐츠(Contents)를 확충하기 위해 「채소류 출하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99년부터 운영중인 「농산물 통합쇼핑몰」의 통합결제기능을 보강하였다.

다섯째, 수출농가와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수매·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개방시대에 우리 농업이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작물양분종합관리(INM)·병해충종합방제(IPM) 실천으로 저투입·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환경친화형 순환농법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해 가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를 통합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가고 있다.

일곱째, 축산업을 개방시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4년까지 4조 5천억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아래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한우 '다산(多産) 장려금제'를 도입하였다.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첨단 '체세포 복제기술'을 실용화하는 한편, 우수축(優秀畜) 출하포상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중심으로 우리 축산물의 위생적인 소비기반을 확충해 가고 있다.

여덟째, IMF위기 이후 시장지향적 경제원리가 강화되고 경영불안요인이 커짐에 따라 소득지원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영농의 위험요소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과 논 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유통명령제 등 수급안정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가소득안전망(Farm Income Safety Net)'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2000년도 농가부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임업은 제1·2차 치산녹화 10년계획 및 산지자원화계획의 추진으로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잘 가꾸어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수산업은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따른 일본, 중국과의 어업협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익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국내적으로는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재편하는 한편, 어업을 「1차산업, 잡는어업」에서 「2·3차산업, 기르는어업」 중심으로 고도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선진어촌상을 구현하고 아울러 협정후속 지원사업의 지속추진, 어업인의 경영부담경감, 수산발전기금 설치 등 중점시책을 통해 어장의 축소와 자원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가고자 한다.

2.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가. 제2단계 투융자계획의 필요성

UR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1992년부터 시작한 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1998년에 종료됨에 따라 농업경쟁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21세기 경쟁력 있는 세계 속의 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마련을 위하여 새로운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 차기협상과 정보·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 21세기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투융자사업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및 관리체계를 개혁하여 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투융자 규모 및 지원분야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총 투융자 규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45조 526억원이며, 이중 중앙정부 투융자액은 37조 8,384억원으로 84% 수준이고, 지방정부 부담액은 4조 7,169억원으로 10% 수준이며, 사업자 부담액은 2조 4,973억원으로 6% 수준이다.

< 농업·농촌 투융자 규모 >

(단위:억원,%)

구 분	'99~2004	구성비	비 고
중앙정부(A)	378,384	84.0	
지방정부	47,169	10.5	
사업자부담	24,973	5.5	
계 (B)	450,526	100.0	
※ 사업자부담은 주로 유통시설, 도매시장,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등 대형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부담액임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중점지원분야는 '98년도에 수립한 「농업·농촌발전 계획」에서 제시된 중점시책을 토대로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발전 등 6개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첫째, 재해에 대비한 배수개선, 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영농기반정비와 경지정리, 발기반정리, 간척 등 농지의 정비 및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발전 분야에 15조원을 지원하게 되며,

둘째, 건실한 농림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후계자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등 교육·훈련사업과 원예특작·축산업구조개선 등 농업경영종합자금,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 송아지가격안정제, 전문중돈업육성 등에 7조 8천억원을 투자하고,

셋째, 농업과학기술개발, 임업시험·육종연구, 종자개발 등 기술개발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정보통신환경 개선 등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1조 8천억원을 지원한다.

넷째, 산지유통센터 등 소비자유통기반조성사업과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및 농림산물 수출기반조성 등 유통개혁·수출농림업 육성에 8조 7천억원을 지원하며,

다섯째, 농공단지 조성 등 정주생활권 개발, 농촌도로·하수도 등 생활환경개선, 농업인 연금지원 등 복지증진에 8조 1천억원을 지원하고,

여섯째, 농업인의 부담경감지원 등 경영안정에도 3조 7천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분야별 투융자 규모 >

(단위:억원,%)

투 융 자 분 야	투융자	구성비
○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발전	149,663	33
○ 건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77,811	17
○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지원	18,063	4
○ 농림산물유통개혁 및 수출농림업 육성	87,142	20
○ 농촌지역 개발과 농업인 복지지원	81,304	18
○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등 농업인 경영안정	36,543	8
계	450,526	100

따라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사업이 완료되는 2004년에는 우리 농업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되고 전·후방산업과 연계되어 산업적 특성과 공익적 기능을 공유한 복합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게되며,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농산물 유통구조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농촌 생활여건과 복지수준도 크게 나아질 것이다.

3. 제2차 수산업 · 어촌 투융자계획

제2차 수산부문 투융자 계획은 제1단계 투융자 사업의 기반위에서 EEZ체제 도입과 수입개방 등 어업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잡는 어업』 중심에서 『자원관리형 어업』,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생산증대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중점 지원하게 되며, 또한, 본격적인 『유통구조개혁』과 종합적인 『어촌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어촌지역의 진흥 및 어촌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과 예산을 긴밀히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99~2004년간의 수산업 어촌투융자는 총 6조 7,597억원이며, 이중 중앙정부의 투융자액은 5조 7,716억원으로 85% 수준이며, 지방정부는 5,377억원(8%), 자부담액은 4,504억원(7%)의 규모이다.

<수산업 · 어촌 투융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99~2004	구 성 비	비 고
중앙정부(A)	57,716	85.4	
지방정부	5,377	7.9	
사업자 부담	4,504	6.7	
계(B)	67,597	100.0	

< 주요분야별 투융자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투융자	구성비
1.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게 어업구조 재편	10,064	14.9
2. 환경친화적 기르는 어업 육성	12,380	18.3
3. 수산물 유통개혁 추진	13,608	20.1
4. 풍요로운 어촌 건설	26,483	39.2
5. 해양주권수호 및 방제능력 보강	5,062	7.5
계	67,597	100

4.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99)

가. 농업·농촌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1) '99농업·농촌 투융자 집행 내역

'99 농업·농촌 투융자실적은 국고기준 5조 6,012억원, 지방비와 자부담 포함한 총 집행실적은 7조 3,218억원이다.

(단위 : 억원)

	45조계획	예산	집행실적
- 계	66,137	75,654	73,218
- 국 고	55,155	57,843	56,012
- 지방비	8,297	11,008	10,912
- 자부담	2,685	6,803	6,294

'99년 투융자 실적 국고기준 5조 6,012억원은 1단계('92~'98) 연평균 5조 1,226억원보다 4,786억원 많고, 당초 '99년 2단계 투자계획 5조 5,155보다 857억원 많은 수준이나 '95~'98 연평균 6조 7,386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는 국가전체예산중 농림부문예산비중이 '95년까지는 13.1%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계속 축소되어 '99년에는 8.6%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 추이>

(단위 : 천억원)

연도별	'92	'93	'94	'95	'96	'97	'98	'99
• 국가전체(A)	365	420	495	582	667	740	835	909
• 농림예산(B)	30	44	56	76	79	80	78	78
• B/A(%)	8.3	10.4	11.4	13.1	11.9	10.8	9.3	8.6

재원별로 분석하면 1단계('92~'98) 투융자의 자부담 비율이 14%였으나 2단계의 '99년 실적은 8%로 감소한 반면, 국고는 75%에서 77%, 지방비 지원비율은 11%에서 15%로 각각 증가하였다.

	42조('92~'98)	45조원('99)
- 국고	394,866(75%)억원	56,012(77%)
- 지방비	57,693 (11%)	10,912(15%)
- 자부담	70,716 (14%)	6,294 (8%)
계	523,275(100%)	73,218(100%)

또한 1단계('92~'98)의 국고 중 예산의 비중이 88%에서 '99년 실적은 84%로 줄어든 반면, 기금(농지기금·농안기금)의 비중은 12%에서 16%로 증가하였다.

	42조('92~'98)	45조원('99)
- 예산	347,981(88%)억원	46,971(84%)
- 기금	46,885(12%)	9,041(16%)
계	394,866(100%)	56,012(100%)

성질별로 보면 42조원 투융자사업중 융자비율은 44%였으나 SOC 등 정부 보조사업 증가로 '99년 45조사업의 융자비율은 29%로 크게 감소하였다.

	42조원('92~'98)	45조원('99)
- 보조	220,218(56%)억원	39,797(71%)
- 융자	174,648(44%)	16,215(29%)
계	394,866(100%)	56,012(100%)

지원대상자별로 보면 1단계('92~'98)사업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40%였으나 보조의 융자전환에 따라 '99년 농업인 지원 비중은 25%로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SOC 등 정부사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42조원('92~'98)		45조원('99)
- 농업인	160,206(40%)억원	→	13,840(25%)
- 생산자단체등	42,132(11%)	→	5,181 (9%)
- 정부사업	40,287(10%)	→	12,028(22%)
- SOC 사업	152,241(39%)	→	24,963(45%)
계	394,866(100%)	→	56,012(100%)

기능별로 분석하면 총투자실적 5조6,012억원 중 영농기반정비등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에 2조2,864억원(41%),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경영체 육성 1조1,884억원(21%)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6,192억원(11%),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6,163억원(11%),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6,057억원(11%), 농림업부가가치제고에 2,852억원(5%)순으로 집행되었으며 농림업 공익적 확충, 경영체 육성 등에 집중 투자되었으나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 투자에는 투자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품목별로 분석하면 42조원사업(어업제외)에 비해 축산·임업지원비중은 줄어든 반면, 생산 기반정비·유통 투자확대로 쌀 및 원예특작비중은 증가하였다

	42조원('92~'98)		45조원('99)
- 쌀	130,637(36%)억원	→	22,750(41%)
- 원예 특작	14,826(4%)	→	3,676(7%)
- 축산	39,946(11%)	→	4,979(9%)
- 임업	23,548(7%)	→	2,604(5%)
- 기타	149,906(42%)	→	22,003(38%)
계	358,863(100%)	→	56,012(100%)

(2) 제 1단계('92~'98) 투융자계획과 비교

'99년 농업·농촌 투융자는 '98대비 감소했으나 1단계사업('92~'98)에 비해 자부담과 융자비중이 줄고, 농업인·개별경영체의 보조축소 및 융자전환으로 농업인에 대한 융자비율이 점차 감소함과 아울러 재해영농기반정비·친환경·기술개발 등 사회간접자본구축중심으로 중점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반면 유통 및 수출부문 투자실적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1단계('92~'98)에서는 SOC성격의 하드웨어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 확충, 품목별 경쟁력 확보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정보화, 경영·기술능력 향상, 유통, 수출 등에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흡하므로 이부분에 중점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제1단계 투융자계획과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비교 >

	제1단계('92~'98)	농업·농촌투융자('99~2004)
▪ 중점지원분야	○ 경지정리, 농기계, 유리온실 등 - 주로 하드웨어중심의 물적 기반 확충	○ 유통개혁, 수출촉진, 농가 경영개선, 친환경농업육성 등 - 주로 소프트웨어중심의 지원 * 재해대비 기반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상습적인 기상이변에 대비
▪ 개별경영체지원	○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지원 중점	○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융자지원으로 전환
▪ 자금지원방식	○ 공급자 위주의 사업자 관리	○ 수요자 위주의 「농업경영 종합자금제」 도입
▪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의 운영 및 사후관리 미흡	○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집행 및 관리

(3) 투융자 효율성 제고 방안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생산기반정비, 시설 및 장비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SOC성격의 하드웨어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 확충, 품목별 경쟁력 확보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이나 유통개선, 환경,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일부 비효율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서는 이러한 부실과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방식과 집행체계, 지원사업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집행관리도 철저를 기하는 등 과감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농업인·생산자단체 등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지속적·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은 SOC성격, 친환경 등 외

부효과가 큰 사업에 국한하고, 농업인·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읍자로 전환하여 농업인 등 개별경영체의 자생력제고와 책임의식을 고양시켜 나가고 있다.

보조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의존의식을 심화시키고 과잉수요를 유발하여 자금관리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사업을 하는 수요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출취급기관에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2000년부터 본격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품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계획과 사업능력에 따른 자금지원체계를 만들고 기술·경영컨설팅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인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의 성격, 지원조건 등 유사기능을 가진 사업은 통합 및 그룹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시행하는 주요 농림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매년 평가하여 사업별 상위, 하위 10%범위내에 속하는 시·군은 차년도 사업량(사업비)배정시 상위는 우대배정하고, 하위는 첫째 10%, 2년연속 부진시 30%까지 삭감하고 3년연속 부진시는 당해사업비의 예산지원 중단하는 농림사업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투융자사업 집행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실, 비효율, 문제가 우려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농림부 소속 3~5급 공무원 180명으로 전국 138개 농촌 시·군별로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각각 일선 시·군의 농림사업집행과 관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함과 아울러 현장의 애로사항을 농정에 반영하는 등 평가와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분야별 · 재원별 농업 · 농촌투융자계획>

(단위:억원)

	총투융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 타
합 계	450,526	378,384	47,169	24,973
1.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발전	149,663	130,593	15,290	3,780
○ 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정비	50,884	50,854	300	-
○ 농지의 정비 및 관리	62,103	53,336	8,767	-
○ 친환경 농림업의 육성	14,312	11,795	1,859	658
○ 산림자원의 확충	22,364	14,878	4364	3,122
2. 건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77,811	71,927	1,986	3,898
○ 교육 및 훈련	9,080	8,936	144	-
○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지원	45,628	45,468	160	-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103	17,523	1,682	3,898
3.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지원	18,063	15,842	1,579	642
○ 첨단 농림업기술 개발	14,449	12,556	1,578	315
○ 농림업의 정보화 지원	1,057	947	-	110
○ 농림업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2,557	2,339	1	217
4.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87,142	67,959	5,118	14,065
○ 산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48,826	37,733	351	10,742
○ 소비자 유통기반 조성 지원	11,211	7,283	3,071	857
○ 물류체계, 정보·교육 지원	5,311	4,749	161	401
○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원	1,169	838	-	331
○ 소비자보호의 강화	2,365	1,981	360	24
○ 축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6,628	6,346	33	249
○ 임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4,169	2,850	282	1,037
○ 농림수산물수출기반 조성 지원	7,463	6,179	860	424
5.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의 증진	81,304	55,520	23,196	2,588
○ 농촌의 다양한 산업 유치	19,965	13,290	5,009	1,666
○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41,404	26,741	14,663	-
○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19,935	15,489	3,524	922
6.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36,543	36,543	-	-
○ 농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지원	26,488	26,488	-	-
○ 농업인의 부담경감 지원	10,055	10,055	-	-

나. 수산업·어촌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1) '99수산업·어촌 투융자 집행내역

'99 수산업·어촌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8,497억원,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집행실적은 9,547억원이다

(단위 : 억원)

구 분	수산진흥종합대책 ('99투융자계획(A))	집행실적	증감 (B-A)	
				%
계	10,566	9,547	△1,109	
국 고	9,386	8,497	△889	
지 방 비	529	583	54	
자 부 담	651	467	△184	

※수산진흥종합투융자 계획은 해경의 장비보강부문 제외

'99 국고 투융자 실적은 8,497억원으로 수산진흥종합대책상의 당초계획보다 889억원 적게 집행되었으며, 이는 수산부문의 예산이 '99예산편성기조인 "구조조정분야(감축)"의 예산에 해당되어 대폭 증액이 어려웠고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척 예산등이 2000년도로 이월된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1단계('92~'98) 투융자 연평균 5,361억원에 비해서는 3,1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98년의 7,903억원에 비해서도 5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산물종합판매장, 수산물 산지종합처리시설 등 수산물유통구조개선 부문과 경영안정특별자금등의 한시적인 정책자금의 증가 때문이다.

재원별로는 1단계('92~'98) 투융자의 자부담 비율이 7.1%였으나 '99년에는 4.9%로 지방비는 8.1%에서 6.1%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고는 84.8%에서 89.0%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의 증가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보조사업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단위 : 억원)

	'92 ~ '98년	'99년
계	4조 4,270(100%)	9,547 (100%)
국 고	3조 7,529(84.8%)	8,497(89.2%)
지 방 비	3,594(8.1%)	583(6.1%)
자 부 담	3,147(7.1%)	467(4.9%)

성질별로는 '92~'98에서는 국고사업중 용자비율은 50.8%였으나 '99년에는 정부 보조사업의 증가로 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8%로 감소하였다

	'92 ~ '98년	'99년
계	3조 7,529억원(100%)	8,497억원(100%)
보 조	1조 8,448억원(49.2%)	5,019억원(59.1%)
용 자	1조 9,081억원(50.8%)	3,478억원(40.9%)

기능별로 보면 어업인의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2,196억원(25.8%), 어항시설등 기반시설 조성 2,107억(24.8%),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1,881억원(22.1%), 수산물유통구조 개선 1,324억원(15.6%) 양식어장개발 등 기르는 어업 육성 기타 989억원(11.7%) 순으로 집행되었으며 한계에 이른 잡는 어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르는 어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한일어업협정 체결 등에 따른 어장의 축소로 어려운 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에 밀려 투자가 미흡한 상태이다.

(2)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

수산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하여 수산특정 연구과제(2000년)로 지자체의 수산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수산업 전체에 대한 RCA 분석을 토대로 수산사업 투융자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총 56개 과제를 위한 수산정책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수산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중이다.

5.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가. 2000년도 농림예산 편성방향

2000년 농림예산은 IMF 경제위기 이후 아직까지 농가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사회의 불안요인인 농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관련조직 및 유통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첫째, IMF로 인한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농가부채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지원, 경영개선자금의 조성에 필요한 이차보전 소요예산을 반영하였고,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자금의 연대보증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예산을 대폭 증액 하였다.

둘째, 농산물 유통단계의 축소, 중간유통마진과 물류비 감축 등을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구조개혁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소비자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소비자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도매시장건설사업비, 농산물공판장건설사업비 등과 도매시장에 대한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소비지 민간유통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산지에서부터 규격선별·공동출하가 가능하도록 산자유통센타를 산자유통의 종합거점유통시설로 육성하는 한편, 하역기계화 및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물류표준화 및 규격출하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물류개선을 추진토록 하였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분야 유통시설확충 등 축산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발전기금 융자지원예산을 대폭 증액 반영하였다.

셋째, 농업조직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였다.

구조조정을 통해 진정한 농업인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동조합의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경제권 중심으로 일선조합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합병된 조합이 유통·경제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유통활성화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다.

또한,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의 출범에 따라 83년만에 농지개량조합비(수세)를 폐지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조기 경영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에도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재해대비 생산기반구축 예산을 확대하였다.

가뭄 및 홍수등에 대비한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99년도 추경예산에서 배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를 증액한데 이어 2000년 예산에서도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재해대비 생산기반구축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다.

다섯째, 농업경영체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이 즉시 지원되도록 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증액하였다.

농업인의 자율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원예특작생산유통사업과 기타전업농, 축산분야의 일부사업을 통합한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농업인의 기술·경영능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상담·기술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농업금융기관이나 지도기관,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이와 관련한 경영컨설팅 지원예산도 확대 반영하였다.

여섯째,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우리농업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하여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등 수출지원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국민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품질인증·안전성 검사·원산지관리 및 동·식물검역 관련 예산도 증액 반영하였다.

나. 2000년도 농림예산 규모

2000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8조 2,423억원으로 '99년도보다 6.1%증가되었다. 기능별·재원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00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차예산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99예산 (A)	2000예산 (B)	증 △ 감 (B-A)	%
기능별	○ 투융자사업	42,036	44,430	2,394	5.7
	○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등	21,679	26,751	5,072	23.4
	○ 양곡지원	9,812	7,215	△2,597	△26.5
	- 수매지원	1,828	2,066	238	13.0
	- 양곡증권기금	7,984	5,149	△2,835	△35.5
	○ 공공근로사업	1,766	1,589	△177	△10.0
	○ 기본적 경비	2,357	2,438	81	3.4
합 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포함시)		77,650 (78,410)	82,423 (86,683)	4,773 (8,273)	6.1 (10.6)
재원별	○ 일반회계	25,099	26,773	1,674	6.7
	○ 농특회계	48,841	53,630	4,789	9.8
	○ 재특회계	3,710	2,020	△1,690	△45.5
양 곡 관 리 특 별 회 계		13,226	12,167	△1,059	△8.0
농 특 세 관 리 특 별 회 계		495	517	22	4.4
국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		1,289	1,225	△64	△5.0
책 임 운 영 기 관 특 별 회 계		-	98	98	-

※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다. 2000년도 수산분야 예산편성방향 및 규모

2000년도 수산분야 예산편성은 우선 선진형 수산물 생산·유통체제 구축을 추진목표로 하여

첫째, 신어업질서에 적합한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고비용 · 저효율의 수산물 유통체제를 개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인프라의 구축과

셋째, 기르는 어업의 집중육성과 다기능 어촌기반시설의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넷째, 자원조성 및 환경과 조화되는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예산의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단위 : 억원)

		'99예산 (B)	2000예산 (A)	증감 (B-A)	%
기 능 별	○ 수산분야 지원	9,679	7,991	△1,688	
	- 어업경영안정지원	2,156	2,055	△101	
	- 어업기반시설	1,769	1,996	227	
	- 어업구조조정	2,163	1,375	△788	
	- 유통구조개혁 등	3,591	2,565	△1,026	
	계	9,679	7,991	△1,688	
재 원 별	일 반 회 계	2,554	2,963	409	
	농 특 회 계	5,388	4,597	△791	
	재 특 회 계	1,737	431	△1,300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정제도 개혁

1. 협동조합의 개혁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기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이 '99.9.7일 법률 제6,018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통합 농협중앙회 설립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새 「농협법」이 공포된 직후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99.9.10일 제1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설립위원회는 협동조합개혁의 상징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각계인사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립위원회는 2000.7.1일 출범할 새 「농협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맡았는데, 그 동안 1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설립기획단」은 법률상의 기구는 아니지만, 중앙회설립 업무가 대단히 복잡·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립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다. 설립기획단은 설립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농·축·인삼협, 농민단체 및 학계인사 등 17명으로 구성하였다. 「설립기획단」은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앙회정관 및 조합정관에 제정안중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설립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다.

(3) 설립사무국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구로서 「농협중앙회 설립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설립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설립사무국은 사무국장(농업정책국장), 총괄반장(협동조합과장) 및 2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총괄반, 법령정비반, 경제사업반, 교육홍보반 등 4개의 작업반으로 분장되었다.

(4) 실무작업단

설립사무국의 지휘를 받아 중앙회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단을 담당하는 농·축·인삼협중앙회의 공동의 설립실무기구로 실무작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었다. 작업단은 농협중앙회 125명, 축협중앙회 49명, 인삼협중앙회 5명 등 총 187명으로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획반, 지도감사반, 총무반, 경제반, 신용1반, 신용2반, 전산반으로 나누어 각 반 아래에 30개팀을 두어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나. 하위법령 및 정관계정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농협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수 1천인(오지 및 도서지역 등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출자금총액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품목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수 200인 이상, 출자금총액 2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조합의 설립기준을 정하였다.

둘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출연금액은 매분기말의 예금 및 적금의 평균 잔액에 1만분의 15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다.

셋째,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이 각 예금자에 대하여 대위변제(代位辨濟)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까지로 하였다.

농협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조합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매분기말까지의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의 5/10,000로 정하였다.

(2) 중앙회 정관 제정

정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원조합수와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총 30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즉, 지역농협은 시·군당 1인을 선출하도록 하되, 지역농협수가 8개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1인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품목조합과 지역축협은 3개 조합당 1인을, 인삼조합은 도별 1인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 조합별 대의원회 구성내역 >

총 계	지 역 조 합			품 목 조 합			총 계	총 계
	지역농협	지역축협	계	전문농협	입종축협	인삼조합		
조 합 수	1,132	146	1,278	45	46	14	105	1,382
대의원수	224	48	272	15	15	7	37	309

그리고 중앙회의 이사회는 총 31인의 이사로 구성하였다. 통합중앙회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회원조합의 권익대변 및 품목조합장 이사가 회원조합 전체 이사수의 1/3이상 되도록 규정한 새 농협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회장 1인, 사업전담대표이사 3인, 금융·경제·지도사업 등의 외부전문가 7인, 지역농협 조합장 10인, 지역축협 조합장 3인, 품목조합 조합장 7인으로 하되, 품목조합의 조합장은 농업계 3인, 축산계 3인, 인삼계 1인으로 하였다.

< 이사회 구성내역 >

회 장	사업전담 대표이사	외 부 전문가 이 사	회원조합장 이사					계
			지역조합		품목조합			
			지역농협	지역축협	전문농협	업종축협	인삼조합	
1	3	7	10	3	3	3	1	20

(3) 조합정관(예) 제정·고시

조합정관(예)의 주요 우선, 조합장 및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조합과 거래할 수 있는 규모로서 신용사업의 경우 1억원으로, 신용사업외의 사업의 경우 지역농협은 거래건당 1천만원, 거래총잔액 5천만원으로,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은 거래건당 2천만원, 거래총잔액 1억5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하였다. 그리고 품목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현행 품목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정관례에 규정하되, 한우조합의 경우 한육우 20두이상에서 10두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다. 통합중앙회 임원 선거 실시

5월 2일 실시된 임시총회에서 전체회원조합장 1,383명중 1,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과 상임감사를 선출하였고 5월 12일 열린 임시대의원회에서는 통합중앙회의 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제외), 이사, 비상임감사를 선출하였다.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표자 회의구성원 전원(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6월 2일 대의원회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선출하게 되었다.

라. 통합중앙회 조직·인사 및 사업장 조정방안

(1) 중앙회의 조직

회장직속기구로서 1위원회, 2본부, 8부실, 2센터 1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즉, 회원조합 지도업무는 지도사업본부와 중앙회의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경

영지원본부를 두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회의 인사 및 사업조정 기능은 인사위원회와 경영기획실로 분리하여 사업대표간 인사업무 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두고, 사업·예산등의 업무는 회장직속의 경영기획실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사업·회계·인사 등은 중앙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산하에 사무처(감사기획국, 감사국)를 두어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역 본부에 감사국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은 본부 위원회의 지휘·통제를 받게 하였다.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은 4본부, 1실, 9부 체제로,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 조직은 2본부, 1실, 4부 체제로, 그리고 신용사업대표이사 직속의 금융기획실을 설치하여 신용업무를 총괄하고 일반은행부문은 금융사업본부, 금융관리본부의 2본부체제로 운영하며, 농업정책금융과 상호금융부문은 농업금융본부로 특화하였다.

시·도지역 본부는 광역행정단위와 같은 16개 시·도지회 체제로 운영하되, 부서조직은 지도사업부, 농업경제부, 축산경제부 및 신용사업부를 두기로 하였다.

(2) 경제사업장 조정방향

농·축산물 공판장은 공판장별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사내분사체를 도입하여 통합운영하며, 물류센터는 (주)농협유통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하나로 클럽의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의 직영사업장으로 전환하고 회원조합이 인수를 희망하는 판매장은 우선적으로 이양하고 기타 판매장은 권역별 종합유통센터의 직영점으로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종합유가공공장, 및 계육가공공장 및 인삼가공공장은 중앙회 사내분사체제로 운영하고 유가공공장은 회원조합에 매각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장육가공사업소중 도축장이 있는 전주사업소는 지역축협에 이양하고 기타사업소는 매각처분하도록 권고하였다. 배합사료공장은 회원조합이 단독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양하고, 권역내 회원조합이 연합하여 인수를 희망하는 사료공장

은 자회사로 전환하되 중앙회와 공동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중앙회의 생활물자공급사업소의 경우에는 사내분사체제로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3) 인사 및 보수제도 정비 방안

인력 구조조정, 직급·호봉 조정등 인사·보수제도는 통합중앙회 출범이후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립위원회에서는 원칙적인 기본방향만 제시하였다. 즉, 인력구조조정은 '98.9월 농·축·삼협중앙회가 각각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기준으로 6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직급 및 호봉은 전체인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중앙회 직원간 형평을 유지하되, 조직안정을 감안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즉, 직급별 승진소요년수가 3개 중앙회간에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급 및 호봉을 조정하되, 승진소요년수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직급·호봉조정보다는 향후 승진인사시 그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개 중앙회의 통합효과를 조기에 발휘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아웃소싱이나 연봉제 도입을 확대하고, 기능·서무직의 계약직 전환 등을 포함한 고용형태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 평가, 이동, 승진, 퇴직제도 등도 정비하기로 하였다.

마.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 추진

먼저, 통합중앙회는 사료공장등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업장 이관 등에 대한 조합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관, 분사 또는 자회사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앙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 통합유통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물류센터, 판매장등 유통시설을 통합정비하여 효율적인 집배송과 판매가 가능토록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특히, 중앙회 판매장

의 경우 회원조합의 브랜드 상품 판매를 더욱 확대하는 등 사업연합체로서의 중앙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셋째, 법적으로 보장된 대표이사의 대표권,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업무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연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이사-이사회 경영계약 제도와 같은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속직원의 채용, 이동, 승진 등에 있어서도 중앙회 전체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사업소관별 특색에 맞게 채용·승진·급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회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하여 조직의 군살과 거품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중앙회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의 구조조정 방안도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계약직·연봉제 등 새로운 노동형태 및 고용관행을 고려하여 새로운 급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도지역 본부, 중앙회 건물, 금융점포폐쇄 사무소 등 중앙회통합에 따라 발생한 불요불급한 고정자산의 매각 또는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일선조합은 첫째,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자본잠식조합, 부실채권 과다보유조합, 적자조합 등 부실조합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경영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방안을 수립하되, 회생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인근조합과의 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소생불가능한 조합은 해산명령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시·군단위 광역합병이 이루어지기 전단계에서 우선 일선조합의 사업연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일선조합이 신용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유통·경제사업의 핵심주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공동출하 및 공동판매 확대, 경영실태 공시 등 조합운영을 위한 표준경영모

텔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유통관련 각종자금을 통합 지원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조합 사례를 적극 발굴, 모델링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일선조합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감사를 2년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인력을 증원하고, 감사전문가 양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조합장 등 임원의 책임경영강화를 위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및 변상조치를 강력히 실시하는 한편, 조합운영의 공개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매 분기말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공개토록 하며, 경영평가결과 등을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

바. 「산림조합」의 지원·육성

정부의 협동조합개혁 방안에 따라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완료하고, 후속조치로 시행령·정관 제정 등을 마무리하여 2000. 5. 1일자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 산림조합(중앙회)으로 명칭 변경하여 새로 출범하였다.

새롭게 태어난 산림조합은

우선 조합원 자격기준이 소재 산주와 산림경영자에서 모든 산주와 임업인으로 확대되어 명실공히 209만의 산주와 임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며, 다음으로 현재의 조합이 실행해 오던 산림사업과 신용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제, 임야중개, 산촌개발, 장제사업까지도 하게되어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됨은 물론, 조합과 중앙회간 경합되는 임도·사방 등 지역사업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더 경쟁력이 강화된 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경영방치 산림에 대한 대리경영사업을 통해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신청, 사업실행 등 산림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시행자 제도를 정착시켜 산림사업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므로써 산림사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산림사업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특히 2000년도는 산림조합이 출범한 원년으로 산주와 임업인 중심의 산림

사업전문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경영평가 및 감사 등 지도·감독기능을 활성화하여 투명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모두 갖춘 경쟁력이 있는 조직으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 수협개혁 추진방향

수산업협동조합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여 건전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어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99. 8월 확정된 수협 개혁계획을 바탕으로 조직과 사업체제를 재편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어업인의 자조적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민주적 수협상 구현을 위하여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여 '99.12.28 국회의결을 거쳐 2000. 1.28 공포 하고 2000. 7.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중앙회의 완전 「독립사업부제」 실시, 이사회의 기능 강화, 중앙회의 조직 개편 및 인원감축, 부실조합 경영개선 및 법인어촌계의 정비와 아울러 은행법을 대폭 확대적용하고 제3자 우선출자제도 도입, 제 1금융권업무의 중앙회 일원화 등 은행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다.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수차례에 걸친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거래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아직도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추진한 유통개선대책이 관련 제도나 운영체계의 개선 등 근본적 개혁보다는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기본틀 속에서 시설확충에 치중한 결과, 급격한 유통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도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없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의 틀과 제도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유통개혁을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을 수립하여 '99년도와 20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새로운 수급안정제도 정착으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

생산계획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수급안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관측센터」를 설치('99.1)하여 생산, 출하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면적·출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채소류 출하조절기획단」을 설치, 농·소·상·정이 공동참여 하여 출하조절·출하규격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유통협약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협약 품목도 마늘·양파에서 방울토마토까지 확대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유통명령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경영비 수준이상의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예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시대상 품목도 '98년 4개 품목에서 2000년 9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사후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여 가격폭락시 정부 수매, 산지폐기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수매·비축사업 자금으로 매년 1조1천억원 수준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2) 산지유통체계 혁신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체계 구축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표준규격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영농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의 조직화 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유통참여가 어렵고 농협도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산지유통의 활성화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일선조합이 생산단계부터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산지유통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협동조합유통활성화자금 지원을 계속 확대(2000년 2,500억원→2001계획 3,000억원)해나감으로써 일선 조합의 경제·유통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의 판로확대 및 소득보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채소생산량의 30%수준을 계약재배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등을 위해 자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하고, 조성액에 대응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산지유통센터(포장센터)를 2004년까지 220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60개소,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하여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여 생산자·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목표아래 정부는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2000년중 상설직거래장터 60개소를 운영하고, 중소 도시에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파머스마켓(농민시장) 17개소를 개장할 것이며, 직거래 장터 시설비와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다.

백화점·할인점 등 민간소매유통업체에게도 농업인, 산지유통센터·종합유통센터 등과의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자본 및 유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협동조합과 산지 생산자단체와 연계, 농산물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물류시설비 및 직거래자금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거래를 통해 '99년 5조6,000억원에서 2000년에는 6조8000억원으로 농산물직거래를 확대하고, 직거래 비중도 15%에서 18%로 늘려나갈 것이다.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그동안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예약·주문거래로 유통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99년까지 6개소를 개장하였으며, 2000년 중 2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종합유통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 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선진유통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운영중인 종합유통센터는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개장 2년차인 '99년도에 1조3,37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농산물전용 판매시설로 정착되어 생산자 수취가격제고 및 소비자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유통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산지 생산자조직을 종합유통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할인점·판매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판매가맹점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매취자금 지원(2000년 320억원)을 확대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5)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및 도매시장의 운영방식 개선

종합유통센터가 개장되고 직거래가 활성화되더라도 농산물의 대부분은 도매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정상화는 유통개선대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시설여건·거래액 등을 감안하여 지방, 신설도매시장 중심으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당분간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를 의무화하여 기준가격 형성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을 경유하더라도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출하자의 부담이 경감 되도록 하역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중도매인의 진·출입 확대로 경매참여의 경쟁 촉진으로 도매단계에서의 유통마진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불법행위 단속강화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중인 전자경매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매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출하주 등록제와 출하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가격등락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유통효율화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저가로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의 농산물 물류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결과 '98년 농산물 물류비 6조 6천억원은 국가전체 물류비의 8.9%에 달하며 국가전체 GDP대비 농업GDP 비중(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엽채류와 같이 부피가 크고, 부패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인력에 의해 상·하차되는 농산물의 경우 물류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농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고, 판로도 확보할 수 있다.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농산물이 포장화, 파렛트적재, 하역기계화 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내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인상을 추진하는 등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농산물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이상이 되고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정비하여 농산물의 포장출하율이 향상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하역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기계화장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99년부터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보조50%, 용자30%)하여 지원하고 있다.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식생활 보장

정부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제고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기존의 품질인증,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 도입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제(GMO), 지리적표시제 등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조사 대상 농산물을 '98년 80개 품목 10,607건에서 '99년에는 111개 품목, 26,319건으로 확대하고, 안전성조사결과 고지사항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성 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또한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인증을 '98년에는 90개 품목에서 '99년에는 10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율적인 품질인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8) 농산물 유통개혁 지원체계 강화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및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투자자중 유통부문예산 비중을 '98년 3,096억원(6%)에서 '99년에는 5,477억원(15%), 2000년에는 8,762억원(23%)으로 확대하였다. 대폭 확대되는 유통예산은 시설확충보다는 협동조합 유통사업지원,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집중 투자하기로 하는 한편, 농안기금은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수출·가공업체 운영에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편,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농안법」을 통하여 유통협약·명령제 등 새로운 가격안정제도 도입과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

나.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WTO체제 출범 이후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등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유통기반시설 확충과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 생산, 유통, 소비량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도록 '99년까지 총 109개소(임산물직매장 93, 목재집하장 16)의 임산물 유통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였다.

2000년도에는 임산물생산 주요 거점지역에 임산물직매장 6개소, 목재종합

집하장 2개소 등 산지유통시설 8개소 및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3개소를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설치하여 산지 유통시설과 소비지 유통시설을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산지에서 소량·분산 생산되는 임산물을 대단위 소비지 권역별로 수집·저장·선별·가공·포장 등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생산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 3개년 사업('99~2001)으로 시설 중에 있다.

또한 밤, 대추, 표고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한 시장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경쟁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지역 특산물을 개발토록 59개 주산단지 중심으로 품목별 기초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는 출하조절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산자조직 단위로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97년도에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98년 6월부터 농림수산유통정보센터 및 산림청 정보망을 통하여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생산량, 가격, 수·출입 동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임업인과 소비자를 위하여 '99년 33개 산림조합에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전자 상거래 사이버시장을 개설 운영 중이며, 2005년까지 임업인 1,000명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의 효율성 및 상품성 제고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임산물 15개 품목에 대한 표준출하규격을 제정·고시하고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출하하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포장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으로 임산물의 브랜드화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다.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고비용·저효율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난해에 마련한 수산물 유통구조개혁 대책 및 세부실천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수산물 유통구조개혁대책의 주요 추진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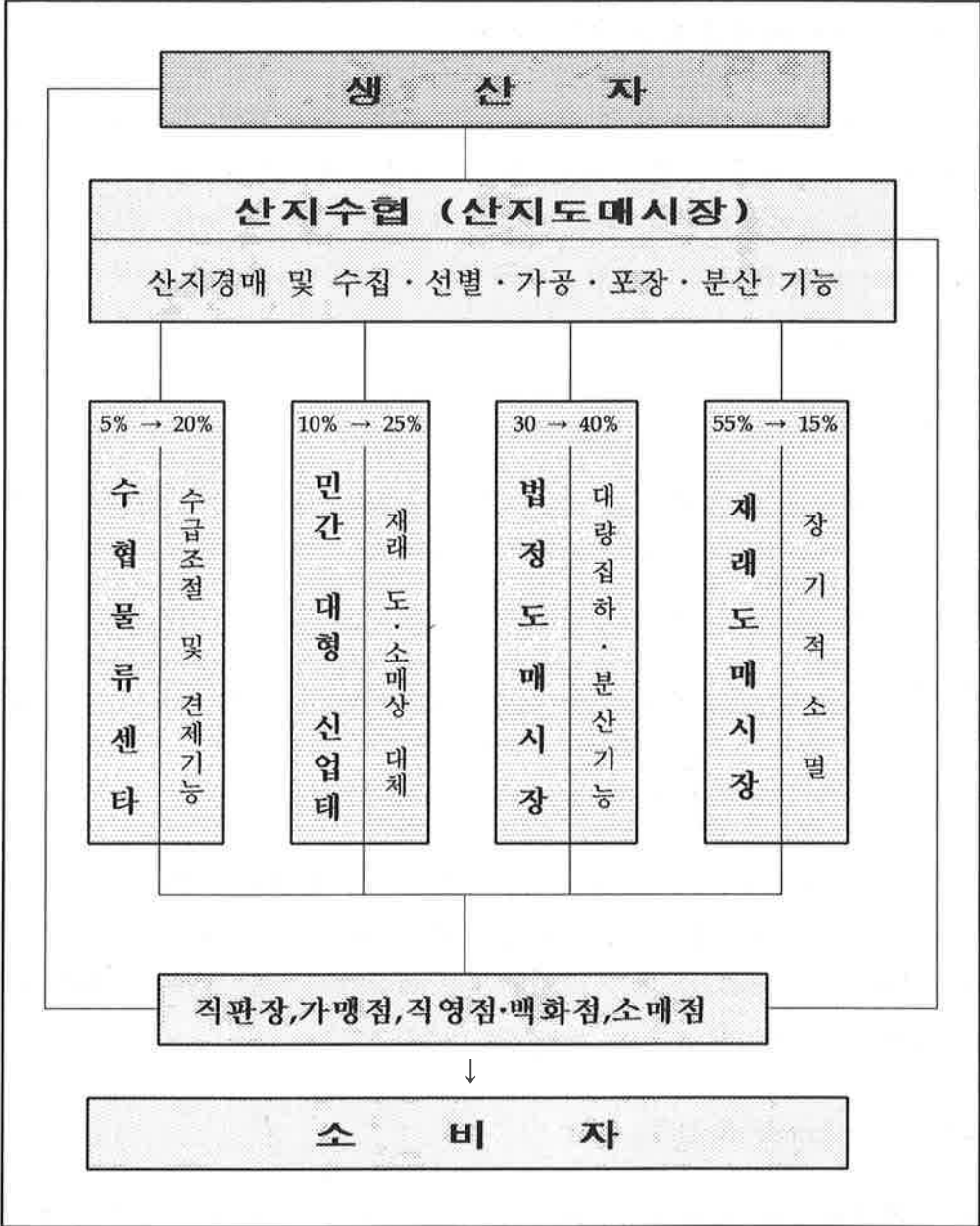
첫째, 산지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위판장을 농안법상 유통시설인 공판장(또는 집하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안법을 개정하였고, 산지위판장 10개년 정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전국 219개 위판장 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산지수협 위판장에서 직접 소포장·가공처리할 수 있는 산지종합처리시설 4개소를 지원하여 소비지에 직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둘째,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개혁을 위하여 농안법을 개정하여 산지에서 1차 경매가 이루어진 품목에 대하여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 매매가 가능토록 하여 산지와 소비지에서 이중으로 경매 되는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을 확대하고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소비지 유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부산감천항과 광주에 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중에 있다.

셋째, 생산자단체인 수협으로 하여금 직거래 시설을 확대 운영토록 수산물종합판매장 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산물물류센터 건설 등을 통하여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도·소매상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직거래 비중을 높여 유통마진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넷째, 산지수협에 표준파레트 및 지게차(551백만원)를 지원하는 등 수산물물류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하역장비 기계화를 추진하였으며,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정보 제공 등을 위한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수협 47개소에 산지의 유통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지원하였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후 유통모델



3. 농수산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행정규제 개혁

가. 농정추진조직개편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능 보강

산업발전과 더불어 다이옥신 등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이 등장하여 국민의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환경유해물질에 오염된 수입축산물의 국내유입방지와 오염축산물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농림부소속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이에 관한 검사·시험·연구기능을 보강하고 일부 하부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의 수출입동물에 대한 검역업무를 축산물 검사부로 이관하여 검역·검사업무를 일원화하고, 질병연구부의 분장업무에 동물용의약품의 인·허가업무를 추가하였다.

축산물검사부에 축산물에 대한 환경오염물질의 오염에 관한 검사·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독성과를 신설하고, 특수독성업무 전담인력 12인(4급 1인, 5급 4인, 연구사 6인, 7급 1인)을 순증하였다.

축산물 검역·검사 등에 관한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직속의 기획조정과를 신설하고, 축산물검사부의 검사기획과를 폐지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대통령령 제16758호, 2000. 3. 21) 및 동시행규칙 개정(농림부령 제1359호(2000.3.21))>.

(2) 종자관리소 농림부 이관

최근 종자산업의 개방화·국제화로 품종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품종보호업무를 효

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의 종자관리소를 농림부소속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 200인을 이체하였다. 다만, 종전 종자관리소 유전자원과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생물자원부에 이관하여 품종개발업무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대통령령 제16932호, 2000. 8. 1), 동 시행규칙 개정(농림부령 제1370호, 2000. 8. 1)>.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증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의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광역화된데 따른 국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지원·호남지원·영남지원을 각각 분리하여 충북지원·충남지원·전북지원·전남지원·경북지원·경남지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정원의 범위내에서 일부 직급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4급 +3인, 4급 또는 5급 -3)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6932호, 2000. 8. 1), 동 시행규칙 개정(농림부령 제1370호, 2000. 8. 1) .

(4) 개방형직위 지정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공직에 민간의 우수전문인력을 유치하고, 공직사회내의 경쟁 활성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99.5.24, 법률 제5982호, 5983호)으로 개방형직위 임용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농림부와 그소속기관직제를 개정(2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하여 실·국장급 직위중 농업정보통계관·농산물유통국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 직위에 대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직 임용근거를 규정하였다. 앞으로 국장급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5) 책임운영기관 지정

정부는 2000.8.28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농림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를 책임운영기관(Agency)으로 지정하고 2001.1.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에게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를 두어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관운영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 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6) 산 립 청

전라남도 및 제주도지역의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소 산하에 영암지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인원 8인(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10급 3)을 증원하였으며, 전 (4), (5)항과 같이 산림청에서도 실·국장급 중 「임업정책국장」과 소속기관 중 「임업연구원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한 상태이며, 산림청 소속기관 중 「임업연구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등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을 정비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01년도에는 금년 봄에 발생한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산불관련 기구 확대 및 인력증원 등을 확대 추진(2001년 2월까지 공공부문 개혁으로 보류)할 예정이다.

나. 농림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1) 주요추진사항

'98년도의 대폭적인 행정규제완화에 이어 '99년도에는 '98년의 기존규제정비계획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98년 규제정비 이후 잔존규제 전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와 민간연구소(서울대)의 사전검토를 토대로 규제정비 작업을 추진하여 423건의 정비 대상 중 폐지 23건, 개선15건 등 38건을 정비하였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 관련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되, 환경·안정·보건 등 국민 전체의 공익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위생 및 품질관리 등 국민의 식생활 및 보건과 관련된 규제는 엄격하게 시행하면서도 국내외적 산업·행정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농업생산성 제고를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였다.

(2) '99 주요 정비내용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농지개량을 위해 경작을 하지 못한 경우는 농지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도시계획시설용지로 편입된 농지에 간이농업용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1회 연장(6년범위)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및 농어촌의 육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양곡매매업의 경우 판매, 소매업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토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완전자유화하고 양곡가공업중 도정업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쌀기준 2톤/1일)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그 이하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사료제조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을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료제조업의 진입을 제약하는 각종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정부양곡운송에 있어서도 과거 수의계약방식으로 독점 운송토록 하던 것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민원인의 경비 및 시간을 절약토록 함으로써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나아가 타조도축의뢰검사규칙을 제정하여 타조도 도축 및 위생검사를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인삼산업법상의 인삼류 제조업체가 인삼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삼산업법상의 신고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3) 2000년 주요규제개혁 추진계획

2000년도에는 지난 2년간 우리부 소관 법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농업경쟁력을 향상 및 국민불편해소에 기여하였으나 규제완화의 체감효과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농업관련 규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를 통하여 21세기 신지식 정보화에 대응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농업인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농업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법령에 위임되어 운용하고 있는 고시 등 하위규정에 대한 규제정비와 아울러 각종단체 및 협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관 및 업무규정을 일제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정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중점과제로 축산업의 진입규제개선, 농업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간소화와 농촌지원관련 사업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편의도모 및 비용 절감 등 규제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연수부에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강좌를 설치 운용하여 민원

인과 직접 접촉하는 농업분야 일선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및 호응도를 높이고 농림부 홈페이지에 규제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농업인들의 피부에와 닿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산림분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우리 청에서도 임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림행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99년에 의결된 규제개혁 내용을 반영코자 산림법, 송이버섯 사용제한고시를 개정하여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였다.

2000년도 추진사항으로서

첫째로 임산물의 굴취·채취요건 완화와 국유임산물매각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완화를 의결하였으며,

둘째로 산지의 보전 및 이용관련 제도개선으로서 복잡한 산지전용 인·허가 체계 단순화(4종→2종), 산림형질변경허가기준 마련 및 『산림전용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및 산림재해 방지대책의 강구 등을 의결하여 산림법 및 국유임산물매각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규제의 사전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규제영향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규제의 신설·강화를 강력하게 억제하였다. 앞으로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대상 및 상존하고 있는 규제를 계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다. 수산행정조직의 개혁

(1) 배 경

'98년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당면한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고 국

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있었고 정부조직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의 효율화·간소화를 추진하여 정부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2차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2차에 걸쳐 시행한 구조조정이 단순히 인력의 감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해양수산부가 21세기 지식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직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주요내용

국제협력 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어업자원국 소속으로 수산관련 국제업무 수행하던 국제협력심의관을 차관직속의 국제협력관(국제협력 담당관, 무역진흥담당관, 원양어업담당관)으로 설치하여 수산부문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운항만, 안전, 해양개발 및 환경 등 국제업무의 비중이 큰 우리부의 특성에 맞게 국제협력 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제2차 구조조정시 폐지되었던 러시아 주재 해양수산관을 신설(4급)하고 일본 삿포로 주재 해양수산관(5급)을 폐지하여 북태평양 러시아어장에서의 어업협력을 강화하였다.

UN해양법 발효로 동아시아 주변국의 자국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총허용어획량제도 실시 등에 따른 어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부응한 지도선의 증척(25명 증원)으로 불법조업 및 자원 남획을 예방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3) 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해양수산부분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존규제의 50%이상 폐지를 추진하고, 수산자원보호 및 식품위생 등 사회적규제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품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행정

규제개혁위원회를 재구성(2000. 4)하고 산하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15명) 등을 구성하여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상황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산업 종사자의 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였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을 보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개정(2000. 1. 28)으로 내수면어업허가 및 절차 중 투망어업을 허가 어업 → 신고어업으로, 낚시료 및 좌대료의 허가권자 결정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면사용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였고, 아울러 수면관리자의 개발의무 및 개발대행업자의 자격을 폐지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2000. 1. 28)으로 어촌계의 설립인가 중 법인 어촌계의 설립인가제, 법인어촌계의 정관변경인가제, 어촌계 합병·분할인가, 어촌계 해산인가 및 보고, 어촌계 합병·분할 또는 해산명령을 폐지하여 어촌인의 자유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앞으로도 잔여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제의 신설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사전검증으로 신설규제를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며, 2001년에는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내부규정 및 유관단체·협회·법인 등의 유사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가. 배경

WTO체제 출범과 농산물시장개방으로 농어업분야에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농어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 추세로 전문기술농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 인력육성이 시급하게 되었다.

특히 농어촌 노동력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성 향상 둔화, 농어촌사회의 활력 감퇴 등 산업간·도농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내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기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급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갖춘 농어업전문인력 육성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방향

가족노동력에 바탕을 둔 개별경영체와 농업조직에 바탕을 둔 법인경영체로 구분하여, 개별경영체는 후계자,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법인경영체는 농업생산 및 이와 관련된 저장·가공·유통 등 2·3차 산업기능을 포함하는 Agribusiness의 중심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계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도 확대·개편하여 농업인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업경영 혁신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농업인 스스로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경영개

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기술컨설팅을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경영모델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경영체의 발전수준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다. 농업인력 육성시책

(1)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지난 '81년부터 농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99년까지 총 120,958명의 후계농업인을 선정하여 19,278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

'99년도에는 5,426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50백만원씩 총1,659억원을 개인별 영농어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81~'96	'97	'98	'99	합 계
○ 인원(명)	97,369	9,374	8,789	5,426	120,958
- 농업인	88,643	8,526	7,862	4,819	109,850
- 어업인	8,726	848	927	607	11,108
○ 지원자금(억원)	12,465	2,500	2,654	1,659	19,278

(2) 전업농·전업어가 육성

우리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농과 전업어를 확보할 목적으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업농의 경우 가족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 경영하고, 영농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장비조작능력을 가지고 있는 55세이하 경영주를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99년까지 82,160호의 전업농을 선정하여 2조 8,676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쌀전업농의 경우 '99년까지 7만호를 선정하는데 이어 '2000~'2002년간 매년 1만호씩 총 3만호를 추가 선정하여 영농기반확대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3) 법인경영체 지원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의 대행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소규모 농가들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제도를 도입하여 농기업운영자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99년 현재 7,650개소(영농조합법인 5,939개소, 농업회사법인 1,711개소)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법인의 난립 및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 회생불가능 법인에 대한 퇴출 유도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96년말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99년 6월말 현재 325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증가추세에 있다. 영어조합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대상 선정요건을 설정하여 매년 정기적인 경영실태조사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4) 농업교육의 내실화

새천년 지식기반사회와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99년도에는 2,335백만원을 지원하여 67,180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체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교육수요자인 농업인의 실질적인 교육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대상자 설문조사, PC통신등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운영하였고, 농업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지식인 성공사례』, 경영교육, 정보화, 환경농업 교육 등을 15시간이상 농업인 교육과정에는 의무화 하였다.

교육기관간 중복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 회계·경영반을 별도로 개설하여 국가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꾀하였다.

또한, '98년도 중단한 후계자해외훈련을 하반기에 재개하여 선진해외농업기술 및 경영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5) 농업경영혁신 추진

농업구조개선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투자효과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농업인의 경영혁신노력을 측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중심이되어 일선 시·군 지도계통조직을 통한 표준진단표 보급과 민간 컨설팅지원사업을 '99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농업인들이 표준진단표 작성을 통해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진단결과를 다른 농가와 비교해 보아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 개선해 나갈수가 있다.

또한, 보다 고급경영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컨설팅지원사업을 '99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여 156개 농가에 대해 컨설팅

팅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4,000백만원을 지원하여 400개 농가에 대해 우수한 민간컨설팅능력을 농가와 적시에 연계시켜 기술, 경영 등 종합컨설팅을 실시하므로써 우리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한 단계 진보시켜 나갈 계획이다.

(6)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여성농업인육성·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데 이어, 2000년에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중견여성농업경영인반과 초급여성농업경영인반을 개설하여 86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후계농업인으로 여성을 859명을 선정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 처음 농가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내용을 보완하여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정책과제의 개발을 위해 농촌지역의 양성평등실현방안과 농촌지역의 영유아보육정책 개발을 연구용역사업으로 시행하였다.

라. 어업인력 육성시책

(1)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지난 '81년부터 농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99년까지 총 11,145명의 어업인후계자를 선정, 1,761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88년부터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왔으나,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92년부터 매년 어업인후계자를 1천명씩 지속적으로 선정·육성하여 전업어가·선도어업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625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50백만원씩 총 159억원을 개인별 영어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81~'96	'97	'98	'99	합 계
○ 인 원(명)	8,762	848	927	608	11,145
○ 자금(억원)	1,119	229	254	159	1,761

(2) 전업어가 육성지원

우리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어를 확보할 목적으로 '92년부터 전업어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전업어가가 되고자 신청한 분야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최근 3년 이상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가 55세이하인 어가를 전업어가 대상으로 선발하여 2004년까지 2,439호를 전업어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99년까지 1,473호의 전업어를 선정하여 7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에도 166호에 84억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어업경영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선도어업경영체 육성 지원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일반어가와, 수산계학생,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99년까지 총 39개소를 선정하여 31억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에도 3개소를 선정, 3억원을 지정하여 각 분야의 모델 경영체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

(4)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96년도말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99년말 현재 447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바,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매년 정기적인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가. 생산기반 정비

(1) 진흥지역 중심으로 우량농지에 대한 경지정리 촉진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필지의 규모화, 용·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 농로의 정비와 환지를 통한 분산된 개인농지를 집단화하는 사업으로, 영농기계화 노동시간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할 수 있어 쌀경쟁력 제고 대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다.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논면적 1,153천ha중 농업진흥지역내 665천ha와 농업진흥지역밖 135천ha를 합쳐 800천ha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추진하여, '99 봄까지 전체 논면적의 60%인 690천ha를 완료하였다.

2000년도에는 '99년 가을에 착수한 9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에 10천ha를 착수하여 2001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일반경지정리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 논면적	목 표	'99년까지	2000년계획	2001년이후
○ 사 업 량	1,153	800 (915)	690 (792)	9 (10)	101 (113)
- 농업진흥지역	754	665 (760)	604 (692)	9 (10)	52 (58)
- 농업진흥지역밖	399	135 (155)	86 (100)	-	49 (55)
사 업 비	-	96,581	58,660	3,354	34,567

※ 마무리 기준, ()는 용배수로, 도로를 포함한 구역면적

(2) 우량농지 200천ha를 대구획경지재정리 추진

대구획경지재정리는 이미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필지규모가 소구획으로 대형농기계 영농이 어렵고 농로가 없거나 좁아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하며 용배수로는 관배수 기능이 겸용이거나 토공으로 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운 지역을, 필지규모는 3,000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를 분리구조물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 및 농산물 운반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 200천ha를 개발할 목표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99년 봄마무리까지 67천ha를 완료하여 34%를 달성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99년도 가을에 착수한 6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가을에는 6천ha를 착수하여 2001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 사업은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사용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경지재정리함으로써 전문영농조직이 대규모로 영농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쌀생산비를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다 큰 효과가 있다.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99년까지	2000년계획	2001년	2001년이후
○사업량(천ha)	200	67	6	6	121
○사업비(억원)	53,958	16,642	1,166	1,383	34,767

※ 마무리 기준

(3) 발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발기반정비 확대 추진

국민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채소, 과일 등 발작물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며, 논에 재배되고 있는 시설채소 등 발작물을 밭으로 유인하여 쌀자급기반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94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 밭 753천ha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10천ha를 개발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99년까지 7,888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목표의 33%인 36천ha를 개발하였으며, 2000년에는 1,550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투자하여 6천ha를 개발할 계획이다.

<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2004년까지 개발목표	'99년까지	2000년계획	2001년이후
○사업량(천ha)	110	36	6	68
○사업비(억원)	25,794	7,888	1,550	16,356

(4) 기계화 경작로 22천km를 2004년까지 확·포장 완료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산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계화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 22천km에 대한 확·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99년까지 7,479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목표의 33.7%인 7.4천k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2000년에는 1,941억원을 투입하여 1.86천km를 확·포장할 예정이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운반시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로 등 일상 생활도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농촌생활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2004까지 개발목표	'99년까지	2000년계획	2001년이후
○사업량(천km)	22	7.4	1.9	12.7
○사업비(억원)	29,262	7,479	1,941	19,842

(5)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중 재해취약시설과 흙수로 12,70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수지를 비롯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2,025개소의 수리시설중 '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2,089개소이고, 간지선 용·배수로의 경우는 46천km중 60%인 27천km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96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91개소 등 전국 1,587개소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48%인 759개소에 달할 뿐 아니라 방조제 외측보호 사석의 이탈,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제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에 의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사업의 확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99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관리 수리시설 4,938개 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65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535개 지구에 총 14,15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3,141억원을 투입하여 191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

구 분	개보수 대상		'99까지		2000 계획		2001 이후	
		%		%		%		%
	개소							
○ 사업물량	14,295	100	5,538	38.7	191	1.3	8,566	59.9
- 농기공수리시설	12,708	100	4,938	38.9	95	0.7	7,675	60.4
- 국가관리방조제	96	100	65	67.7	10	10.4	21	21.9
- 지방관리방조제	1,491	100	535	35.9	86	5.8	870	58.3
	억원							
사업비 계	48,543	100	14,157	29.2	3,141	6.5	31,245	64.3

(6)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은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수리시설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대책사업이다.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는 180천ha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안성천, 삼교천 등의 큰 하천변과 그 지천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수령논 등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하배수개선사업의 대상면적은 55천ha에 달하고 있어 2009년까지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99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및 저습답 235천ha중 92천ha가 완료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123개 지구에 2,181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39개지구 9천ha를 완공하여 배수개선율을 43%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대 상	'99년까지		'2000년		2001년		
		%	%	계획	%	이후	%	
○ 사업량	천ha							
	235	100	92	39	9	4	134	57
	- 지표배수	180	100	90	50	9	5	81
- 지하배수	55	100	2	3	-	-	53	96
○ 사업비	억원							
	35,800	100	11,610	32	2,181	6	22,009	62

(7)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한해상습농경지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99년까지 총논면적 1,153천ha중 879천ha가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수리답으로 조성되었으나, 아직도 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논 목표면적 1,100천ha중 969천ha를 수리답으로 조성·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90천ha의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농업진흥지역내 논 735천ha에 대한 수리시설을 완비코자 추진 중이다.

2000년도에는 3,083억원을 투자하여 67천ha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7.3천ha를 완공할 계획에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

총논면적	목 표	'99년까지	2000년계획	2001~2004년	2004년이후
1,153천ha	1,100	879	7	83	131

(8)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새로운 간척토지를 창출함과 아울러, 육상운송거리 단축, 생공용수 공급기반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새만금지구를 비롯한 7개지구, 124천ha를 대상으로 '99년까지 35%(16,701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고, 2000년도에는 41%(국고 1,689억원, 농지관리기금 755억원 계 2,444억원)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지구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사업비			사업기간
			'99년까지	2000년계획	2001년이후	
계(7지구)	124,430	47,154	16,701	2,444	28,009	
미호천(Ⅱ)	4,430	1,786	1,085	240	461	'89~2002
금 강(Ⅱ)	43,000	4,873	1,587	290	2,996	'89~2004
홍 보	8,100	2,267	1,369	180	718	'91~2003
영산강(Ⅲ-1)	13,160	5,723	1,526	385	3,812	'85~2004
영산강(Ⅲ-2)	7,840	2,414	873	150	1,391	'89~2004
새만금	28,300	22,307	10,251	1,134	10,922	'91~2011
영산강(Ⅳ)	19,600	7,784	10	65	7,709	타당성 및 기본조사 중

(9)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은 전국 연안 자연부락 단위인 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 지역의 교통, 상권, 물류, 관광등의 종합적인 기능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가장 큰 재산인 어선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94년부터 2004년까지 5,432억원을 투자,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에 선착장·물량장 등 어선계류시설을 포함하여 '99년까지 전국 85개 어촌종합개발사업권역내의 소규모항포구를 대상으로 426개 어항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에는 32개권역내의 73개 항포구에 188억원을 투입,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나. 농업의 기계화

(1) 농업기계화 추진방향

2000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전문경영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일관기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밭작물용, 축산용, 여성전용농기계 등 실용성있는 농기계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농기계산업의 전문화와 수출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보조의 용자전환과 자부담 확대로 농가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농기계의 다양한 개발보급촉진을 위해 용자제도를 정율제로 전환하며 진입장벽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폐합하여 농기계구입대상에 따른 지원상의 차별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수리용부품·장비의 적기확보,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을 다양화하는 등 농기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기계생산의 원활한 지원과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비축자금의 적기 공급, 국제농기자재박람회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자율로 농기계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여 농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용성 있는 농기계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관련 첨단기술개발과 현장애로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며 신기술농기계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기계 지원공급

'99년까지는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을 일반융자 지원사업, 벼직과 및 밭작물 농기계구입지원사업, 생산자조직과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00년에는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인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불편을 방지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책임경영의식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 일부 보조지원 하던 것을 모두 융자지원으로 전환하였고,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부지원농기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형식검사에 합격한 농기계만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나 형식검사는 기계화촉진법상의 안전장치의무기종과 인증대상이외의 승용형기종에 한정하였고, 나머지는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검정기종 및 자유진입기종으로 농기계의 성능 등에 따라 다양화하였다.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자에게만 부여하였던 농기계 공급자격을 완화하여 직접 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한 생산업체도 공급이 가능토록 하였고, 구조가 단순한 기종이거나 전장품(電裝品)이 포함된 기종은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직접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기계의 융자지원 방식을 정율제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기종별로 최근 공급대수가 가장 많은 형식의 공급가격을 기본으로 하여 기준가격을 정하고 공급가격에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였다.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수리용부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적기영농을 가능케하고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347억원의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장 농기계 운반용 차량 구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트랙터, 콤파인등 대형정밀농기계의 원활한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300개소를 설치하고 2000년부터 신규로 50개소의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도 보관창고 설치비를 융자지원하고 있다.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수리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마을단위 순회수리봉사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사용한 농기계를 점검·정비한 후 보관창고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정비·보관의 달 캠페인」을 11~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4) 밭작물 및 축산분야의 기계화 촉진

벼농사 주요농작업의 기계화율은 1999년 현재 97%에 달하고 있으나 밭농사 주요농작업의 기계화율은 42%에 머물고 있어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밭작물과 축산분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늘, 사과, 시설오이, 시설장미, 양돈 5개작목을 대상으로 14개의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1998년에 양파, 양계를 대상으로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심토파쇄기,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승용관리기용쟁기 등과 같은 농기계를 1999년부터 추가로 지원공급하고 있으며, 자동관수분배기등 생력기계화 효과가 큰 밭작물용 농기계 11개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여 생산 및 구입자금의 100%를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무, 배추, 고추 등 5개작목에 대하여 기계화재배양식의 표준화를 추진하므로써 밭작물용 농기계의 개발 비용을 줄이고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첨단 농기자재의 국산화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자금도 16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5) 여성용 농기계의 개발 보급

농촌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여성화·노령화 추세에 따라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며 영농에 참여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남성위주로 농기계가 개발보급됨에 따라 여성이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여성이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를 개발 보급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히 보급된 농기계중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중소형 농기계를 여성이 다루기 쉽게 개량하는데 목표를 두고 농촌여성의 농기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2000년도까지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확대

농가가 생산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 처리하는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노동력을 절감하고, 쌀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낮추며, 고품질의 지역별 특산미를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수확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99년까지 31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한데 이어, 2000년에는 12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360개소로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인근 쌀작목반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단위 : 개소, 억원)

	'91년~'99년	2000년계획	2001년~2004년	계
개 소 수	312	12	36	360
사 업 비	3,619	458	4,326	8,403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 및 토양등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 풍·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받기반정비, 관수시설의 확보, 비가림시설, 공동육묘장 설치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첨단시설을 위한 기존 유리온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온실의 표준화

및 시설자재 국산화로 설치단가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며, 인삼산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인삼생산기반의 확충과 인삼유통지원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수
출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
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현장애로 기술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
을 개발하여 파종·수확등 전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축산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
산농가에게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의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자동화·현대화
된 사육기반을 구축하였고, 축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 건
설, 공판장 및 냉장육판매업소 시설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자가배합사료 제조시
설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1년까지 총 9개소(기존 2개
소 포함)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7개소를 완공하였고, 2개소는 추진중
에 있다.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이 완공되어 본격 가동되면 유통단계의 축
소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문경영체가 생산·가공·유통을 종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양축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도축·가공·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계열업체 3개소
에 2000년 34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에는 2개업체에 12억원을
지원하여 축산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
시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가.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참여도 신장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은 농업후방관련산업으로서 농산물 수요를 증대하고 농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67년 특산단지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89년부터 농산물가공산업으로 본격 추진한 사업으로 향후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관련산업의 핵심사업이다.

'99년말까지 2,70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에 1,073개소의 농산물 가공 공장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5,304억원, 농어촌 유희인력 고용은 약1만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5인이상 농가공동체, 일반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2000년도에는 10개소 건설에 4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최근의 국내 경기침체로 제조업 전체가 위축되고 식품산업 소비침체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많은 농산물가공업체가 부도 등 경영부실사례가 나타나기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영세·한계업체 124개소('98~'99)를 퇴출조치하여 전체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지원에서 소프트웨어적 경영·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9년부터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컨설팅사업을 실

시하여 농산물가공업체의 기술·경영·마케팅 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전체 전통 가공상품에 대한 TV, 라디오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나. 농기계산업의 육성

(1) 주요기종의 전문생산업체 육성 및 수출확대 추진방향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농기계 생산비용의 절감과 R&D 투자 강화 및 해외시장 수출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농기계 업계 주도로 구조조정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기종별 전문화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별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거점생산화, 수출전략 모델 개발에 대한 R&D 및 생산비축자금을 지원하고, 2000년도부터 신규로 국제농기자재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한편 아시아 등 주요국가의 농업기계화 추진시책 관련 자료를 수집 제공할 계획이다.

(2)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 및 수출지원실적

'99년에 농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별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우선 1단계로 주요부품 및 엔진(대형)의 공용화, OEM화를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트랙터, 콤파인 등 승용형농기계의 기종별 사업교환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원가절감을 촉진키로 하였다.

농기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중국 대련 국제농기자재박람회 등 3개 국제박람회에 2억원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농기계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였으며, 농림기술개발사업자금에서 수출전략형 예취기 등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비를 지원하였다.

(3) 향후 추진방향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 유도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2001년도에 국제 농기자재박람회 참가비 2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수출 전략모델 개발비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다. 종자산업의 육성

(1) 종자산업 육성방안 추진

'97년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 등 종자산업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자수급의 안정도모와 종자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육성방안을 '99년 5월부터 추진중이다.

(2) 종자업체의 품종육성 경쟁력 강화 및 종자 수출확대

채소부문의 종자업체는 '99년말 현재 70여 업체로 품종육종기술 및 경영규모 등이 다국적 기업에 비하여 비교열위에 있으므로 종자업체의 전문화 촉진을 위하여 업체별 전문작물을 2~3개 작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99.7) 앞으로 품종육성 관련 정책자금은 전문작물에 대하여 중점지원하고 농촌진흥청 등과의 첨단육종기술 협동연구나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우량종자개발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2004
지원금액	16,378	3,757	3,000	2,440	2,905	24,500

무, 배추, 고추 등 전통 채소품목의 세계적 신품종육종 기술을 이용하고

협소한 국내 종자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종자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2000년8월 현재 10,180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5%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출수매자금 및 수출품종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종자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 유전자원 관리강화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품종 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0. 6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보유중인 유전자원은 144천여점이며, 국가 및 민간부문의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관련 규정을 정비중에 있으며 또한, 수집·보존중인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화를 강화하여 신품종 육종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구축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요

농림업분야의 기술은 타분야와 달리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이 농림업과 관련한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점차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기초식량의 자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21세기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농특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첨단기술개발사업 2,678억원,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1,472억원)에 4,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기술개발사업은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타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과제와 품목별 일관기술 연구를 위한 기획연구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은 영농·영림·영어 현장에서 재배, 사양,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 환경, 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애로기술과제와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인개발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과제현황

'99년말 현재 총 1,604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과제가 951건, 첨단기술개발사업과제가 625건,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과제가 28건이다.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중 현장애로기술과제는 '94년에 188건, '95년에 108건, '96년에 82건, '97년에 47건, '98년에 73건, '99년에 79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577 건이며, 농업인개발과제 또한 '97년에 처음으로 130건, '98년에 138건, '99년에 106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374건이다.

첨단기술개발사업 중 첨단기술과제는 '95년에 처음으로 205건, '96년에 97건, '97년에 70건, '98년에 91건, '99년에 119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580 건 이며, 기획연구과제는 '97년에 처음으로 11건, '98년에 10건, '99년에 22건 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43건이다.

한편 벤처형 중소기업 개발과제는 '98년에 11건, '99년에 17건이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농림기술개발과제 현황>

구 분	연 구 과 제			
	선 정	계 속	완 료	기 타
현장애로기술과제	577	155	394	28
첨단기술과제	582	381	184	17
기획연구과제	43	43	-	-
농업인개발과제	374	210	163	1
벤처형중소기업개발과제	28	26	1	1
계	1,604	815	742	47

한편 '99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742개 과제로 이중 337개 과제는 산업화 또는 산업화 추진 중에 있으며, 459건을 특허출원하였으며, 334개 과제는 현장적용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이들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 계약을 체결한 우수 기술개발 과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업체 기술이전우수과제 내역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기술이전기업체	기술료 징수액 천원
○ 온라인 컴퓨터 건조제어기 개발	안동대학교	영농농기구 제 작 소	11,335
○ 축산분뇨 및 액비처리를 위한 연속시스템 개발	(주) 우 진	(주)우진테크	52,740
○ 양돈장에서 간이휴대용 돼지 생체정육량측정기 개발	한국양돈연구회	주)메디슨	33,500
○ 중저온 건조저장기법을 이용한 고품위쌀 생산기술 개발	한국식품개발 연 구 원	한성공업(주)	90,000
○ 칩 고살제 약제제형개량 및 처리기구 개발	임업연구원	주)유비물산	41,000
○ 과채류 공정육묘를 위한 플러그묘 일렬동시 접목 로봇 개발	경북대학교	주)대동기전	99,728
○ 다목적 승용관리기 본기 및 작업기 개발	대동공업(주) 기술연구소	대동공업(주)	450,000
○ 솔잎혹파리 방제용 자동수간주사기 개발	임업연구원	남산엔지니어링	22,200
○ 항암성 식품소재원으로서 CDFA 생산 및 활용기술 연구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주)화인코리아	72,450

(3) 2000년도 제도개선 사항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Project Base System)를 실시하는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강화하여 우수한 연구자들의 참여유도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림기술개발 사업실시요령(훈령)을 개정(2000. 3. 2.)하였다.

기술개발 및 산업화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업대응자금(matching fund) 한도를 개방하여 참여기업은 과제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기술의 산업화 및 실용화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 요

정부에서는 수산업을 21세기 종합과학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7년까지는 농림수산분야를 농림부에서 함께 추진하여 왔으나 해양수산부의 발족에 따라 '98년부터 수산분야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 이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과 수산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며, 수산기술개발사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과제현황

지금까지 총 246개 과제를 선정하여 149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97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2000년 6월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149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산업체에 기술이전되었고, 16개 과제는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62개 과제는 대어업인 기술지도에 활용되고 있고, 49개 과제는 특허출원(85건 출원, 27건 등록)하는 등 연구성과가 조기에 어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연도별, 분야별로 D/B화한 기술중개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 농어업정보화 촉진

산업경제시대의 뒤를 이어 21세기 지식정보화 경제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난 산업경제시대에서는 토지·자본·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얼마나 투입했느냐에 따라 그 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어 왔다. 즉 누가 생산성이 높은 토지를 많이 획득하고 노동과 자본을 확보, 투입하느냐에 따라 국가 또는 산업의 흥망이 좌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산업경제시대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좁은 토지와 상대적인 투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는 우리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노력여하에 따라 선진농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지식·기술·정보와 그 이용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생산요소가 부존자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기술·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활용하느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첫째, 농촌지역의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둘째, 농업인의 지식·정보 활용능력이 높아지도록 지원하며 셋째,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국가 정보화추진전략 「Cyber Korea 21」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어디에라도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이다. 다만 실제 일반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통신망 구축은 민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가 경제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

고 있어, 수요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경우 ADSL 등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도·농간의 정보통신기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여온 결과, 2000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읍지역(총196개)에 초고속통신서비스(ADSL)가 단계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면 지역(총1,229개)에 대하여도 금년 중에 기술검증 시범사업(8개 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고속통신서비스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농가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88농가를 대상으로 위성수신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기술발전 상황을 감안하여 위성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초고속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고 정보화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98년부터 2004년까지 15만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추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진전이 빨라지고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의 정보화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계획을 수정, 교육목표를 2000~2002년까지 17만명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과 지역 여건상 교육기회가 없는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현장 위주의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화만 하면 지역농과 대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주는 '농업정보119서비스'를 전국 13개 농과대학에서 실시하여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컴퓨터 등 교육 장비를 탑재한 특장차(버스)를 이용하여,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시·군의 전산교육장이나 지역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하는 시군 단위의 기초교육과정과 농림수산정보센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분리하여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수사례발굴·보급, 정보경진대회와 농업인이 쉽게 접근가능한 인쇄매체(팜플렛, 농업정보 소식지 등)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3)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컨텐츠 확충

정부는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정보활용,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AFFIS 운영기관인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인터넷서비스 제공기관(ISP)으로 육성함으로써 AFFIS에 한번 접속하면 PC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99년에 개발한 농산물출하지원시스템(<http://chulha.affis.net>)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농업인, 상인 등 시장참여자에게 도매시장별 거래가격, 거래물량, 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99년부터 운영중인 인터넷 「농산물 통합쇼핑몰(<http://www.a-peace.com>)」의 참여 쇼핑몰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소비자의 One-Stop Shopping을 위하여 통합쇼핑몰에서 상품구매와 대금결제 한 번에 가능하도록 통합장바구니기능과 대량직거래, 공동구매 등 다양한 기능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농업인들의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99년에 106농가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200농가에 대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정보화문화의 저변확산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4) 농업을 제도약사키는 지식경영·지식농업 정착

농업인 및 농업관련 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곳에 모아 공동 활용하고,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식관리시스템에는 농업 생산기술 뿐 아니라 농업경영, 유통, 가공, 농업정책 등의 자료가 포함되며, 특히 신지식농업인의 성공사례, 농업과 관련된 Know-how,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지식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농업정책이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농산물에 관한 외국의 정책, 정보, 질병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정부에서 구축하고 운영하지만, 농업인의 수요나 필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한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농업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등 농업인이 주로 참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농림지식관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5) 어업정보화 촉진

새로운 UN해양법협약에 의한 국제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어업의 어로구역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잡는어업」에서 「기르는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양식기술정보 활용과 전국도매 시장의 시황정보를 보면서 출하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어업부문에든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 산업분야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업부문의 정보화 기반을 크게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어선조업 DB구축과 수산물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어로어업에 필요한 어군정보와 출하에 필요한 시황정보 등을 어

업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수산물의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정보통신이 PC통신에서 인터넷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어군정보, 위판정보, 어업기술정보, 어촌정보등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어업관련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 추진

수산물의 유통체계가 수산물 및 유통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유통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H/W부문 보다는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S/W부문 활용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99년부터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99년에는 정보화촉진기금과 자체예산 3,161백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조합 47개소에 조합업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지조합의 업무전산화를 하였고 수산물 직거래알선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판정보를 D/B화하였다.

또한 2000. 5월에는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산지수협 위판정보, 도매시장 경락정보, 민간창고 보유물량, 도소매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도 수산물유통정보화 사업은 예산 10억원과 운영기관 부담 336백만원 등 총 1,336백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수협 15개소에 대한 정보화 사업 확대와 수도권 도매시장 4개소에 경락정보 D/B를 구축하며, 도매시장 1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고, 수협중앙회에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여 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유통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가. 수출진흥대책

(1) 농산물수출 현황

농산물수출은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임과 동시에 WTO체제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고 아울러 우리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표준화 등 유통시스템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의 바로 이웃에는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시장인 일본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증대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국내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연도(96~99년)의 농림축산물 수출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 동남아 등 가공식품 주력수출시장의 IMF영향으로 가공 농산물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수출농업인의 수출마인드 향상 및 첨단 유리온실 등에 대한 투자성과의 가시화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며 중장기적인 수출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표1) 최근연도의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96	'99	증감율(%)
(전체 농림축산물)	1,707.0	1,680.0	△1.6
○ 가공 농림축산물	1,086.5	888.5	△18.2
○ 신선 농림축산물	620.2	791.3	27.6
- 김 치	39.1	78.8	101.1
- 돼지고기	194.0	340.0	75.3
- 채 소	45.7	86.0	88.2
- 화 훼	4.5	19.8	340.0

한편, 수출농업의 인프라 구축의 정도를 나타내는 참여농가와 수출업체, 수출국, 수출품목 등도 상당한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수출농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표2) 수출인프라의 변화 추이

· 수출참여농가수 :	<u>(‘96)11,681</u> →(‘97)15,030→(‘98)15,644→ <u>(‘99추정)17,000</u>
· 수출업체수 :	<u>(‘96)870</u> →(‘97)1,094 →(‘98)984 →(‘99)1,282 → <u>(2000추정)1,400</u>
· 수출국 :	<u>(‘93)144국</u> →(‘94)135 →(‘97)147 →(‘98)174 → <u>(‘99)174</u>
· 수출품목 :	<u>(‘93)913품목</u> →(‘94)1,007 →(‘97)997 →(‘98)1,220 → <u>(‘99)1,276</u>

(2) 그간의 수출농업 육성시책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을 대별하면 『국내의 생산 및 공급기반구축』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첫째, 수출전문단지를 97년의 70개 단지에서 99년 111개 단지로 확대 지정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를 확보하였으며, 이같은 수출단지의 보강을 통하여 수출업체와 산지농협간의 계약재배를 활성화함으로써 97년 247톤에 불과하던 계약재배실적이 99년에는 406톤으로 두배 가까운 신장을 기록하였다.

둘째, 수출컨설팅도 98년 이후 123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WTO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수출물류비의 지원을 97년 51억원에서 99년에는 154억원으로 확대하고 97년 1,976억원수준이던 수출자금융자규모도 99년에는 3,126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출관련 경영체의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토록 하였다.

넷째, 국내외 수출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5개국 7개 농업무역관

(KATIC)과 25개국 64명의 모니터로부터 입수되는 수출관련정보를 인터넷정보망인 KATI 와 FAX신문 등을 통하여 적시에 실수요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첫째, 박람회 참가 및 특판전 개최를 확대(98년 12회→99년 25회)하여 직접적인 수출 증대를 실현시킴과 동시에 신규바이어의 발굴, 우수선진제품의 벤치마킹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산 농산물의 세계브랜드화를 위해 인삼 및 김치캐릭터를 제정하고, 종래의 라디오와 빌보드 위주의 단선적인 홍보에서 현지TV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오고 있다.

셋째, 일본의 JUSCO등 해외의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지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수출시스템의 구축 노력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의 수출지원시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규모도 꾸준히 확대하여 96년 63억원 수준이던 수출지원예산을 99년에는 236억원 규모로 4배 가까이 증대시켰다.

(표3) 수출지원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96	'97	'98	'99
계	6,280	10,130	16,253	23,579
□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3,066	4,723	5,962	8,224
○ 국제농산물박람회	1,818	2,520	3,711	3,796
○ 수출활성화 사업	134	418	363	777
○ 대형유통업체 직거래체제구축	-	-	33	840
○ 수출홍보사업	525	1,186	1,067	1,994
○ 해외시장정보사업	589	599	788	817
□ 농축산물 판매촉진	3,214	5,407	10,291	15,355
(수출자금융자)	(1,471)	(1,976)	(2,671)	(3,126)

(3) 향후의 추진대책

지난해까지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높은 신장세를 보이던 농산물 수출은 금년 봄에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8월까지 소폭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8월까지 돼지고기의 수출차질분이 전년동기 대비 131백만불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돼지고기를 제외한 수출실적은 전체농산물이 15.8% 신선농산물은 13.9%의 높은 실질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2000.8월까지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 천톤, 백만\$, %)

구 분	'98	'99	2000 목표	'99. 1~8월		2000. 1~8월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합계	1,635.3	1,679.8	2,115.0	857.1	955.8	886.3	943.1	3.4	△1.3
○ 신선농림축산물	669.1	791.3	733.0	126.2	389.8	86.2	284.4 (30.2)	△31.7	△27.0
○ 가공농림축산물	966.2	888.5	1,382.0	730.9	566.0	800.1	658.7 (69.8)	9.5	16.4

따라서 정부는 돼지고기 이외의 품목이 지니고 있는 수출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재개되는 시점까지 농산물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통합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99년 487억원 규모인 수출자금지원규모를 금년도에는 670억원으로 38%수준 확대함으로써 농협이 수출농업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수출확대 노력의 가속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수출시책에 대한 평가항목을 지자체의 수출증대 노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평가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약 100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대일시장의 조기개척을 위하여 일본을 4대권역(關東, 關西, 北部, 南部)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시장개척,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關東권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東京위주에서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요코하마 등 권역내 거점 도시로 수출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關西권역의 경우에는 僑民이 많이 살고 있는 점을 살려 시장개척 유망품목의 Market Test기지로 적극 활용토록 하며, 北部권역은 시장 미개척 권역이고 겨울이 여타권역에 비하여 긴 점(10~4월)을 활용하여 채소류 등 신선식품 위주로 시장개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南部권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점과 지자체간의 교류가 활발한 점등이 농산물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하여 수출물류센터 건설 등 수출물류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농산물 수출의 거점지역인 전남, 경남에 각1개소의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장관주재 수출확대대책회의 개최를 통하여 수출지원기관에서 마련한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지원기관 상호간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수출관련 정보의 공유, 시장개척활동의 공동추진 등 수출지원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4) 수산물 수출진흥대책

수산물 수출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산물 수출시장이 일본, 중국, EU, 미국 등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시장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첫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여 18백만\$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고, 이태리와 중국에 수산물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수산물 해외특별 판촉행사를 미국과 일본에서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구매선 발굴과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둘째, 주요 수출상대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정한·일수산물교역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의 수출입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일 생식용 생굴 수출을 위한 등록양식장 및 가공시설 확대등으로 원활한 수출환경을 조성 하였다.

셋째,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하고, 수출유망 수산물인 김에 대하여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국내 공항에 광고물을 설치, 체계적인 홍보 실시로 외국인 구매력 창출을 유도하고, 주요 수출유망국의 시장을 조사하여 관련업계에 배포하는 등 업계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넷째, 부가가치가 높은 활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활어 운반선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활어운반 특수차량의 일본 국내 운행을위한 협의를 추진중이며, 수출주력업체 지정 등을 통해 수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나. 수입관리대책

(1)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로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4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초과수요로 인하여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기관 배정방식, 수입권공매방식, 실수요자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18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는 지정기관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쌀, 대추 등 6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누구 나가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옥수수, 대두 등 40개 품목그룹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요자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기관배정방식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생긴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88~'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과 가공제품이 저율관세로 개방된 품목 중 일정품목은 매년 증량을 실시하여 저율관세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서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품목은 사료용 원료인 옥수수, 대두, 보조사료 등과, 국민기초식품의 생산원료인 맥주맥, 맥아 등 20개 내외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2) 관련법상의 각종 제도의 활용

<할당관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료용곡물, 농업용원자재 등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였다(2000년 하반기 밀, 사료용근채류, 농약원제 등 21개 품목).

특히, 2000년 하반기에는 구제역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료용곡물에 대하여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사료용근채류, 채종박, 면실박).

<조정 관세>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해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2000년에는 찐쌀, 바나나, 메주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특히, 산업피해구제제도에 의한 수입제한이 1999년 종료된 고추장의 경우 신규로 조정관세를 적용하였다.(8→50%)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UR 협정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은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할 경우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에는 녹두, 팥, 메밀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다.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수입개방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마늘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건의와 대 중국 협상결과에 따라 2002년 12월 까지 긴급관세가 부과되었다.

(3) 농축산물 밀수근절대책 추진

국내외 가격차가 큰 중국산농산물 위주로 성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밀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조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99년 6월부터 20개 내외의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기준신고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신고된 가격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관세청과 협조하고 있으며, 원산지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요원 325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으며, 필요시 관세청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산 휴대농산물 과다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조하여 부산항과 군산항의 1인당 반입 면세한도를 80kg에서 2000년 4월부터 50kg으로 인하 조정토록 하였고, 금년에 중국과 신규로 항로를 개설한 속초항과 목포항에 대하여도 50kg을 적용토록 하고, 그동안 휴대농산물의 90%정도를 차지해온 인천항에 대해서도 금년 10월부터는 50kg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4)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방지 등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수입산농산물(176개), 국내산농산물(148개) 및 국내가공품(105개)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단속 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설·추석 등 성수기에는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에 대한 범국민적인 감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5) 수산물 수입관리대책

'97. 7. 1일 이후 수산물 수입전면 개방 및 최근의 경기회복에 편승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생산어업인의 피해를 저감하고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수입관리대책으로

첫째, 활돔, 활농어, 냉동오징어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는 저가 및 저질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동낙지, 활돔, 새우젓, 냉동명태필렛, 활미꾸리지, 활뱀장어 등 7개 품목

은 종전의 종가세 방식을 『종가·종량 선택세』 방식으로 변경,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입이 급증하여 수산업기반 붕괴와 생산어업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국내 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역제도 강화차원에서 '99. 9 부터는 중국산 뱀장어(대만산 포함)에 대하여 항생물질(옥시테트라사이클린)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0. 6월부터는 냉동어패류에 대하여 『선검사 후통관』 제도로 전환하였을 뿐만아니라, 2000. 8월부터는 양식 활뱀장어에 대하여도 옥소린산(합성항균제) 검사기준을 제정 시행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의 안정성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협정(Arrangement)』을 체결하는 한편, 중국의 수산물 가공공장을 국내에 등록하도록 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붕어, 잉어등 내수면 어종의 낚시터 방류시 질병검사(이식승인)를 의무화함으로써 질병 유포에 의한 국내 생산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 원산지 미표시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원산지 방식을 허위표시에 대한 고발위주로 전환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넷째, 2000년말 시작될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협상을 철저히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새로운 수산물 수입제도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6. 친환경농업의 육성

그동안 증산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의 환경정화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여 우리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 중장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농업육성법을 '9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농업환경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및 농약빈병·폐비닐·폐농기계와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농사 중 발생하는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우리나라 전체사용량은 19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농약사용량을 2004년까지 30%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개발·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농약질감형 재배 기술지도, 천적이용 등 병해충종합방제 체제 구축과 미생물농약, 식물성농약 등 저독성농약을 개발·보급 중이다.

(2)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99년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으로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
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는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
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비료사용량을 2004년까지 30%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작물 양분
종합관리(INM)실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토양정밀검정에 따른 시비처
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주문형 배합비료, 축분퇴비 등 환경친화형
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비료사용량을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3)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9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축종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추
정할 경우 연간 약 49백만톤에 달한다. 축산분뇨처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대상 농가는 농림부에서 처리시설 설
치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를 공동수거·정화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99년말 기준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총 74천 농가로
92%인 68천 농가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설치농가 중 86%는 자원화시설,
14%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였다. 가축분뇨는 2010년까지 축산퇴비로 자원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무단 방
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4)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99년말 현재 3,365천대로서 이 중 약 0.8%인 26천대
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74%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나머
지는 농가에서 부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 중이다.

이러한 폐농기계를 수거, 해체, 압착할 수 있도록 폐농기계처리장 설치를 '94년부터 '96년까지 지원하여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에서 “폐농기계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폐농기계처리장에서 수거·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폐농기계 수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시장·군수가 마련한 장소이외에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99년 각각 75백만개, 97천여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환경부 산하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48~61% 수준에 그쳐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4월과 11월을 중점 수집기간으로 정하여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집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농약빈병의 경우 '97.10월부터는 농협을 통하여서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이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과다 의존하여 농작물이 재배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하천·호수의 부영양화, 축산분뇨 등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용수의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시용, 객토사업 및 농업용수 수질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토양개량사업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다. '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1년에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여 토양개량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2) 객토사업

사질토 등과 같은 생산성이 낮은 토양과 휴·폐광산 인근의 오염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한 객토사업은 '96년까지는 1년 상환의 단기성 농업 경영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97년부터는 국고용자(3년)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휴·폐광산 인근의 오염농경지의 개량을 위해서 '99년부터는 지역특화사업에 포함시켜 전액 보조사업(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다.

(3)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추이를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전국 저수지 18천개소에 대한 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수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시설과 규모가 비교적 큰 주요 농업용수원에 대하여는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연2회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측정망은 '98년에 200지점, '99년에 350지점을 운영하였고, 2000년에는 450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550지점, 2002년 이후에는 550지점을 운영하는 등 수질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질조사결과에 대하여는 환경부, 시·도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저수지 주변 청소,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중 수질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자연정화기법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99년에는 4개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이 중 2개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 중에 있다. 2001년에는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용수 수질개선 공법개발 등 연구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1)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중산간지의 중소규모의 가족농들이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면서, 토양과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착 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지당 2억5천만원씩, 총 2,50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1,00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99년까지 462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0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여 40개소를 조성 중에 있다.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지구당 10~20억원씩, 총 189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99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여 11개 지구를 조성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여 9개소를 조성 중에 있다.

(3)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벼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 오염원을 줄여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안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7억원을 투자하여 16개소의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을 선정하여 2001년까지 3년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벼 재배에 있어 친환경농업의 핵심기술인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통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99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행에 따른 농가 소득손실을 직접지불로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할 경우 ha당 524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 10,572ha에 5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동일 대상면적에 대하여 3년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난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유통시설 확충, 구매자금 지원, 품질인증 확대 등 판매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생산·유통 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행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 농가자율신고로 운용되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와 정부 등 인증기관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통합하여 국제수준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 중이며,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유통시설의 확충, 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확대, 소비자의 현장체험기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농어가경영안정대책의 추진

가. 농가경영안정대책의 추진

(1) 추진배경

'97년말 외환위기이후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국민소득이 감소되고 소득 탄력성이 큰 쇠고기, 우유, 채소류를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둔화되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농가의 농업조수입은 대폭 감소한 반면, 비료, 농약, 농구비, 사료 등 자재값이 인상되어 농업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채를 진 농가는 원금상환 및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농촌금융의 관행으로 되어있는 농업인 상호간의 연대보증 문제는 한농가의 도산이 타농가 또는 농촌사회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연대보증 문제의 해결이 농가부채문제의 커다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 농가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금리인하, 특별경영자금 지원, 농업자금연대보증 해소대책 등 다양한 농가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대책의 내용

(가) '98년 농가부채부담 경감조치

'98년 상반기중 축산 및 시설원예농가의 정책자금 5,752억원을 3~9개월 유예 조치하고 경영자금 6,500억원을 추가 지원하였다. 또한 조달금리의 상승으로 농특회계와 경영자금 금리를 3.5%P 인상하여야 하는 여건에서 농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1.5%P만 인상하고 농림부 소관 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반기에는 농민단체, 학계, 생산자단체등이 참여한 농가부채대책 위원회를 구성,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농가부채대책을 시행하였다. '98~'99.12월중 상환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3,225억원을 2년간 연기하고 금리도 1.5% 인하하여 IMF이전 수준 금리(5%)로 환원 조치하였으며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도 2%p 인하 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99년 농가부채부담 경감조치

특히, 정책자금 대출액이 3억원이상인 경영체에 대하여는 work-out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회생이 가능한 경영체에 대하여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인수희망자에게는 인수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자금을 연리 5%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207개소에 780억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회생 및 고액시설물의 유희화 방지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99년3월에는 농업생산목적의 고금리 상호금융 부채 차입으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특별경영자금 7,000억원을 87천 농가에게 연리 6.5%,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금리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99.7.1부터는 지난해 1.5%p 인상되었던 농·축산경영자금 44,700억 원에 대한 금리를 5%로 인하하여 IMF이전 금리수준으로 환원시켰다.

또한 농림수산업자 무입보 신용보증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업인의 보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99.8월에는 생산목적으로 고금리 자금을 차입한 농업경영체의 상호금융단체, 연체해소자금, 과수낙과 및 인삼침수피해 지원을 위해 1조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확보하여 78천 농가에게 연리 6.5%, 2년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채무자 한 사람이 도산하면 많은 농업인이 줄줄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연대보증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8.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키로 함으로써 안정된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연쇄도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농촌민심 안정에 기여토록 하였다. 이 제도는 2000.1월부터 시행되었다.

'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은 농촌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여 농업금융 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가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 왔다.

(다) '2000 농가경영안정대책 추진

최근 농가의 경영상황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농가가 IMF로 인한 어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부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가의 경쟁력과 경영능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농가부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1) 상호금융 대체자금으로 농가당 1천만원까지 지원

상호금융자금은 조합원간의 자금과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상호부조적 성격의 자금으로 통상 일선조합에서 12%대의 금리로 빌린 자금이면 상호금융자금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대책으로 농가가 '99.12.20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금융자금중에서 농가당 1천만원까지는 연리 6.5%로 1년간 대체해 준다. 이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53만건 4조6천억원정도의 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83%인 45만건 3조8,292억원을 지원 완료하였다.

2) 중장기 정책자금 1년간 상환연기

중장기 정책자금은 통상 상환기간이 2년이상인 정책자금으로 영농자금등 년초에 대출받아 연말에 갚는 단기성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98~'99기간중 상환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과 2000년중 상환도래 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1년간 상환연기하고 있다. 10.10현재 19만건 6,800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18천여건 860억원을 상환연기하였으며, 나머지 신청분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1년간 상환연기될 것이다.

3)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8천억원 조성·지원

농업경영개선자금은 부도나 파산위기 등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대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준전업농규모 이상이거나 농업용 대출잔액이 5천만원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로 경영평가결과 회생이 가능 하다고 판정된 자에게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타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한 기존대출금 대체용, 신규 운영자금용, 연체해소용, 대위변제용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 6.5%,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개선자금은 연체자라 하더라도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연대보증이나 추가담보없이 농업인의 신용으로 연체금액만큼 대출토록 하였으며 연체가 해소되면 농신보의 보증으로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0.10현재 43천여건에 2조8천억원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27천여건에 16,041억원 규모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나머지 신청분에 대해서도 심사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4) 농업인 연대보증 해소

'99.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대책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대책은 '99년 12월 31일이전에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용자금에 대해 농업인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도덕적 해이조장, 도시영세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으로 많은 농업인이 연대보증의 고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파산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10.10현재 37만건 3조3천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8만건 3조억원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였으며, 나머지 신청분도 지원심사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나. 어가 경영안정대책 추진

한국의 수산업 경영여건은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발효와 해양환경의 악화 및 어업자원의 감소, 수산물수입 개방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고비용·저생산성이 심화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 경영비를 지원하는 영어자금 1조 2,050억원, 해외자원생산자금 3,520억원 등 '99년도와 동일한 1조 5,570억원을 공급하고, 영어자금은 지난해 인하된 금리 5~5.5%, 해외자원생산자금은 7~7.5%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99년 12월, 고금리 상호금융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이자 및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6.5%의 특별경영자금 3,060억원을 확보하여 연리 12%이상의 상호금융대출금 1,000만원까지 대체·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이자부담 경감과 상환유예를 통해 어업경영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으며, 어업인들이 이미 사용중인 중장기 시설성 수산정책자금 중 상환이 도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연 5%의 금리로 경영안정특별자금 28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수산업자금 50백만원 이상 대출받은 어업경영체중 회생가능한 경영체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자금 2,000억원을 확보, 금리 6.5%,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IMF 이후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산정책자금 대출금이 어업인 상호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신규대출이 제한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용으로 사용한 3,000억원 규모의 대출금에 대하여 동일인당 1억원 범위내에서 연대보증을 해제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로 대체하여 어업인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해주고 있다.

그리고 각종 수산시설사업 등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IMF이전의 대출금리인 5%로 지원하는 등 어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업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8.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가.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IMF관리체제로 들어간 '98년 이후부터 도시와 농촌가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농업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농산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상황하에서 농업인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짐에 따라 농가소득불안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농가소득안전망」(Farm Income Safety-Net)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없이 단편적이거나 생계지원식의 소득안정지원시책이나 WTO에서 제한되는 가격지지시책에 의존해 왔고 WTO체제에서 허용되는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친환경 직접지불제가 각각 '97년과 '99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긴 했으나 농업인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업·농촌기본법상 규정된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제39조)과 자연재해에 대한 시책(제40조)등을 구체화하여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해 갈 계획이다. 즉, 자연재해나 가격불안 등 농업위험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고 농업인들이 다양한 소득안전장치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시혜성, 일회성 지원보다는 농가 스스로 위험에 대비해 나가며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나.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추진

(1) 도입필요성

주곡자급기반 확보 및 논농업 지속을 위해서는 논농업 경영농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수매제도 및 비료가격 보조 등으로 농가의 소득과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왔으나 WTO체제하에서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가격지지 및 생산요소 보조 등의 농업정책은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제도에 의한 농가의 소득지지 효과는 UR협정에 따라 매년 750억원씩의 국내 보조금이 감축됨에 따라 더욱 줄어들게 되어 추곡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 생산규모 유지를 더욱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WTO체제에서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EU·일본 등에서도 널리 시행중인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과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환경친화적 농업의 정착으로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는 점에 논농업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 그동안의 주요 추진 내용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99. 4. 3. 농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쌀 직불제 도입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농정국, 식량국이 참여하는 Task Force를 구성하여 쌀직불제시행방안을 검토하였으며, '99. 6. 정부·학계 및 농촌경제연구원간의 2차례 협의회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특히 '99.9.21. 국무회의에서는 2001년 논농업직불제 도입을 전제로 2000년 6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하였고, '99.12.11.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과 농림부 차관보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농림부의 담당국장과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논농업직접지불제기획단」을 설치·운영하면서 2000. 8월까지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직불제 세부도입방안,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였다.

또한 직불제기획단의 논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부, 농진청, 농협, 농업기반공사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농림부내에 설치하여 기획단 운영의 내실을 기해왔다.

이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세정책연구원, 충북대, 서강대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관련기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농민대표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2차례 (3.22, 5.12)와 논농업직불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3)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시행방안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농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인중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보전·관리, 친환경영농 이행,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 등 지원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국고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농지는 실제 토지이용 실태를 기준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고 2000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논)으로 하며 정부가 제시하는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실경작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하는 실천의무는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를 위한 논두렁설치, 2개월 이상 담수 등의 논농업 경영의 필수 사항 이행과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량 사용 및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의무 이행여부의 점검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기술센터·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의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Monitoring체계를 구축 시행하게 된다.

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추진

최근 집중호우, 태풍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가경제안정 및 농업재생산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무상양곡대, 학자금 등 생계비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규모화·전업화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농업재생산능력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79년부터 수도작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 타당성 조사 및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오랜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농가의 호응도 부족 등 여건미비로 도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98~'99년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극심해지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99년 9월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가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보험도입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2000년 3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농가 소득안전망(Safety-Net) 구축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공식 보고하였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준비위원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왔다. 또한 그 동안 논의과정을 통해 마련된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나주와 군위(5.18~19)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도입준비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다른 농작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험 적용대상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 서리이며, 보험운영은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과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줄이고 가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운영비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전담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01년 3월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금년중에 제정 추진할 계획이다.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시책

1. 쌀산업

가. 쌀 산업의 여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수, 한발 등 기상 이변이 과거에 비해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발생기간도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전망은 과거에 비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하여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와 일본의 농림성에서는 인구증가, 농업용수 부족, 환경악화등으로 생산량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세계곡물 수급사정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세계인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식량생산의 단수증가는 한계에 도달해 계속 늘려 나가기 어렵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농지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이 경제성장으로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최대한의 국내생산능력(Capacity)을 확보하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의 주곡인 쌀의 경우, 지난 96년이후 풍작과 안정적인 수준의 생산으로 세계식량 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17~18%수준(62일분)을 다소 상회하는 안정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한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쌀의 자급은 매우 중요하다.

나. 중점추진시책

(1)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논 면적을 2004년까지 110만ha 확보하고 벼 재배면적은 92만ha를 유지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농지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94년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농지전용규제완화시책이 농지면적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97년부터는 농지법령을 개정하여 시설별,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위임되어 있던 허가권한을 상향 조정 하였으며, 진흥지역내 우량농지는 타용도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전용될 경우에는 대체농지를 지정토록 하는 등 농지보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가용토지가 제약된 우리의 국토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토지수요는 산지나 구릉지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고 산지를 50%이상 이용시에는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보완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농지감소 추세를 더욱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농지보전 차원에서 먼저, 기존농지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농업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이용 및 경작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억제하고 농지처분의무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늘리는 땅이 없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시행령 개정('99.4.19)을 추진하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제한을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에 대한 근거도 관련법령에 명시하는 등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대책

2002년까지 경영규모 확대와 쌀 생산비 절감 등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쌀 생산 전문농가를 확보하기 위해 5ha이상 규모 쌀 전업농 6

만호와 3~5ha 규모 쌀 전업농 4만호 등 총 10만호를 육성하여 쌀 생산량의 50%, 유통량의 80% 수준을 담당케 할 계획이며, 2004년까지 농기계를 보급하여 쌀 생산에서 건조에 이르기까지 일관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벼 우수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1,600개소의 양질 다수성품종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양질 다수성품종을 '99년에는 벼재배면적의 78%에서 2000년도에는 87%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쌀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2000년까지 31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 36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전체 쌀 생산량의 40%를 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쌀 유통혁신 및 추곡수매 추진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작목반 등과의 계약재배로 품종을 단일화하여 고유브랜드화를 유도하고, 가격차등화로 양질미 생산을 촉진하여 쌀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계열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수매도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국회동의를 받아 영농기 이전에 희망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농가에 대하여는 일정한 선금을 지급하는 『약정수매제도』를 '9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2000년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국회동의를 받아 예시하고 수매계획량 629만석에 대해 506천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농가에 대하여는 조곡(1등급기준) 40kg가마당 2만3천3백원에 해당하는 5,701억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4)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 실시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이양을 통한 규모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으로서 벼 재배를 3년이상 경작한 농가가 쌀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시,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

제」를 '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연령을 6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3년중 1년 이상만 벼를 경작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99년부터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 규제지역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하는 농가 및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ha당 52만원씩 직접지불로 보조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쉽게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농업에 있어 농가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홍수방지, 지하수함양,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채소·원예산업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주산단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기계화·시설자동화를 통해 규모화된 전업적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배·시설채소·꽃 등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1) 채 소

< 노지채소 >

고랭지 채소, 고추, 마늘 등 품목별로 주산단지작목반 및 농업인 중심으로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농가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가공·유통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영농규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이식기, 종합처리장, 공동육묘장 등 주산단지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공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4년까지 전작업 기계화가 이루어 지도록 생력기계화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고추 1회 수확품종 등 품종 및 재배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업관측센터를 설치('99년 1월)하여 농업인에게 생산 출하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면적, 출하량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재배사업을 실시

하여 농가의 판로를 보장하며 농·소·상·정의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함과 아울러 경영비 수준이상의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예시제를 실시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해나가고 있다.

< 시설채소 >

'90년대 초반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에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97년 38백만불에 불과하던 채소류 수출이 99년 86백만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 지원된 시설원에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경영정보를 제공 및 현지순회지도로 시설원에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국내의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 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원예시설, 자재 전문업체에 대한 농업용 기자재 생산시설 자금으로 '92년부터 매년 30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유망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단지를 2004년까지 21개소를 조성하고,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수출물류비 및 수출 수매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 과 수

'94~'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 20ha 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키낮은 밀식사과원조성등 생산기반시설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

과장 등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과실판매촉진사업 지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판매촉진행사의 확대로 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수출시장을 다변화 등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으로 '99년 신선과실류 수출이 전년보다 31% 증가한 2,265만\$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해외시장정보수집·수출협의회를 통한 수출업체 애로해소 등 수출확대 기조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화 훼

절화·분화등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출하 등을 자율 조정토록 유도하며, 현대화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일괄 지원하는 화훼생산유통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대도시 법정 도매시장(공판장)을 확대 설치하고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출하량 확대 등 운영을 활성화하며, 규격출하품 포장재 지원 등 규격출하를 확대하고 화훼공판장에 유통정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화훼생산·유통 지원단지중 수출유망작목 재배단지 40개소를 2004년까지 수출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출하조절자금 등의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3. 축산업

가. 한우산업

쇠고기 및 생우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2000년대 한우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업경영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기반시설, 축사시설 및 사육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규모화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 송아지생산안정제 및 다산장려금제 시행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여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완 및 암소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송아지 3회이상 생산농가에 대해 두당 10~2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및 시장차별화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시장차별화를 위해 고품질 쇠고기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한우개량단지 중심의 한우등록 관리체계를 5두 이상의 개량농가 중심체계로 전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한 한우에 대한 출하포상금을 '99년 두당 8~12만원에서 2000년 10~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거세장려금(10만원/두)을 2000년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와 품질고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체세포 복제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 “복제소생산기술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복제수정란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3) 한우고기 소비기반 확충

한우고기의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2000년까지 73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2,0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2000.9.21~24에는 「2000우리축산물 브랜드전」을 개최하였으며, 조직적·체계적으로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는 한편 농협중앙회, 백화점, 할인점, 슈퍼 등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판매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나. 낙농산업

일정수준 이상의 전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시설 및 자동화설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자동화 및 규모화로 낙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1) 우량젖소 보급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 동안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의 추진으로 두당 산유량이 크게 향상 ('99 산유량 : 검정참여농가 7,629kg/두, 일반농가 6,135kg/두)되어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전체 젖소중 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두수비율을 선진국의 4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2000년에는 3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낙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집유일원화 등을 통한 새로운 낙농제도 정착

집유일원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낙농가 및 집유조합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유통장비개선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조속한 낙농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집유일원화 사업 참여 확대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진흥회가 주관하여 수요량에 맞는 원유의 계약생산 및 계약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수급을 도모하고, 용도별에 따른 원유가격의 차등가격제를 검토하는 등 안정적인 소비기반확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유의 과잉생산이나 소비 감소시 낙농진흥회를 통한 원유 및 유제품을 수매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수매자금 416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유업체를 대상으로 원유의 검사공영화를 전면 실시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원유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원유검사의 공정성 확보 및 원유품질 개선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3)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낙농자조금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

OEM방식에 의한 직공급 확대, 학교우유급식의 확대 등 유통구조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낙농자조금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우유에 대한 정보제공과 우유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다. 양돈산업

개방화 시대에 선도적 양돈산업을 이끌어갈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 시설, 축사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촉진시켰고 양돈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 전문종돈업 육성 및 우량종돈 보급 확대

전문종돈업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00년대 국내 종돈 소요두수의 40% 수준을 공급하기 위해 '96~2000년간 원종돈농장 5개소, 종돈농장 3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인증제도”의 활성화로 종돈수출 및 우량종돈 분양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이동제한지역 등에서 돼지 408천두와 안·등심 5,511톤을 수매하였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돼지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등의 상환을 유예하였으며 「우리축산물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산하기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별로 직거래를 통해 수매돈육을 판매하였다.

돼지생산두수가 늘어나고 수출재고물량 적체 등으로 인해 9월부터 돼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정부에서는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돈 10% 감축 추진, 육가공업체에 대한 비축자금(336억원) 지원, 학교급식 및 군납 등 단체급식 확대 추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캠페인 전개,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소비홍보 등 다각적인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였다.

(3) 돼지고기 수출재개 대책 추진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의 수출 재개를 위해 일본, 홍콩 및 필리핀 등의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국에 통상·검역관계관을 파견하여 위생조건 협의 및 해외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홍콩 및 필리핀 등에는 돼지고기와 부산물 수출이 재개되었으며, 일본에도 가열 돈육가공품의 수출재개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구제역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구제역의 조기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양계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인 양계산업의 주축이 될 전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시설, 자동화시설 및 장비 등을 종합지원하여 양계농가의 시설자동화·규모화에 기여하였다.

(1) 닭 개량사업 추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닭의 개량을 활성화하여 농가의 우량 종계 도입을 유도하고, 양계농가가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닭경제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에는 17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에는 142백만원을 지원하여 닭의 형질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도계장 및 가공·유통시설의 정비와 현대화 추진으로 유통구조 개선

도계장의 시설정비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통합 정비하여 현재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육가공장, 계열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브랜드·부분육 유통을 주도하는 등 새로운 유통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3) 양계산물 규격거래 및 브랜드화 추세

계란은 6개 등급(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으로 구분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대란이상은 일반소비자, 중란이하는 가공공장과 요식업소에서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제품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포장형태의 브랜드제품이 생산·거래되고 있다.

마. 축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1)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조기활성화 추진

축산물 완전시장개방 체제하에서 낙후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육류유통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1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9개소(기존 2개소 포함)를 건설목표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할 수 있

도록 하여 소·돼지를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고품질 육류를 공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LPC 1개소당 처리능력은 1일 소 50~100두, 돼지 750~2,000두 규모로서 지금까지 7개소를 완공하였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다. 2001년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건설이 완료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육류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위생적인 생산·공급이 확대되어 냉장·부분육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식육판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소매유통구조 개선

LPC, 브랜드업체,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직판장 및 가맹점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한우전문점 및 식육모범업소 지정제를 실시하고 기존정육점을 정예화·현대화하기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식육판매점을 선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 Barcode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매단계에서 소매단계까지의 거래투명성을 확보하여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3) 가격차별화 유도 및 물류표준화 기반 구축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냉장부분육 유통활성화를 위한 도매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축산물공판장에서 부분육 상장경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분육 유통을 활성화하여 선호부위와 비인기 부위의 수급안정과 가격차별화를 유도하고 있다.

쇠고기 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지역은 대도시 위주의 19개 지역에서 2000.7.1부터는 79개 지역거점으로 확대하여 지방에서도 고급육에 대한 가격차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도록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에 제비용과 적정마진을 고려한 표준소비자가격을 산정 공개하고 있으며, 유전자를 이용한 육류감별법을 조기 개발하여 적용하고, 축산물 명예감시원제도 등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2004년까지 6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1)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신규 초지조성이 어려우므로 기성초지를 보완하거나 답리작, 사료포 등 사료작물재배에 중점지원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용수원 개발, 목로개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생산기반을 개선하였다.

조사료 생산확대·이용을 위해 사료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벼짚 수거용 기계보급과 벼짚의 암모니아 처리이용으로 사료 영양가치를 증진시켜 벼짚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조사료 생산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위해 대농가 교육·홍보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조사료 생산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등

축산농가가 농산 부산물, 남은음식물 및 곡물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쇄기 및 배합기 구입비를 '99년 72농가에 23억원, 2000년 64개 농가에 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하는 섬유질사료제조시설에도 '99년 12개소, 2000년 4개소를 지원하는 등 자가배합사료의 이용 증대를 도모하였다.

사. 사료산업 구조조정 추진

2단계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농협중앙회 소유의 9개 사료공장을 회원조합에 이양할 계획으로 회원축협 및 농협에 전 사료공장 이양을 공개하였으며, 회원조합이 연합인수를 희망하는 사료공장은 우선적으로 회원조합에 이양하고, 회원조합의 연합인수가 곤란한 공장은 중앙회와 공동출자하여 자회사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농업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에 가축분뇨의 액비화·퇴비화 등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2000년에는 3천개소에 562억원을 지원하였다.

(2) 축산분뇨처리 표준설계도 제작 보급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종류가 다양해 농가의 선택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98년까지 축종별·규모별로 가축분뇨 적정처리모델 30개를 설정하였으며, '99년에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8종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축산분뇨시설의 건실한 시공과 더불어 축산 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촉진해 나가고 있다.

(3) 수분조절제 수급안정 및 축분퇴비 수요 확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소요되는 수분조절제인 톱밥의 가격상승으로 축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톱밥공급을 확대하고 수분조절제 절약형 처리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축분퇴비의 품질향상과 수요확대를 위하여 농·축협에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4)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량 기준 설정, 작물별·계절별로 축분퇴비·액비의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자.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체계의 강화

(1) 축산물 위생수준의 획기적인 향상

식육중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대상을 확대(잔류물질 : '99년 44종 → 2000년 45종)하여 위생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운영요령(SSOP)의 도입·적용으로 축산물 생산·유통시 생산자중심의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도축·가공·유통단계에 일관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본격 시행하여 도축장·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위해축산물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유통중인 위해축산물에 대해 회수제도(Recall system)를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정비

2000.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파주 등 6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

나 대만 구제역 사례에서 제기된 진단기술의 미흡, 예방약 부족, 초동방역지원 등의 문제점을 참고한 차폐연구시설 운용, 예방약 비축, 방역 CPX 실시 등의 사전 준비와 범국가차원의 방역 및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여 더 이상의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하여 축사 등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일제소독과 예찰의무요원(2,348명)을 통한 농장예찰 강화, 사육중인 소·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한국형 긴급방역행동지침(SOP)을 작성하고 정례적인 도상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방역 추진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등 방역체계 정비를 추진중에 있다.

(3) 돼지콜레라 근절시책 추진

2001년 돼지콜레라 근절을 목표로 강도높은 돼지콜레라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특별대책 후속조치로 예방약 100% 공급, 농장채혈 및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하였고 소독시설 운영실태점검 및 처분조치를 강화하였다.

관련기관과 농가 등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교육홍보 및 점검은 실시하였으며 근절대책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시장·군수책임하에 총괄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다. 예방접종 미 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300만원이하) 처분 강화, 돼지콜레라 지역담당관 운영 및 농가현황 전산화 등을 통한 현장 점검체계 확립,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0년에 1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책 추진결과 돼지콜레라 발생이 '99.8월 용인에서 마지막 발생후 2000.10월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 상태이며, 면역형성율이 '98년 76%수준에서 2000년 96%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예산의 확대지원, 혈청검사 강화, 예방접종 미 실시 농가의 규제 등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여 2001년 돼지콜레라 근절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4. 임업

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 조성

(1)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

새천년을 맞아 생태적 자원조성과 산지 소득증대, 풍치경관 조성, 수원함양 제고 등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림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 경제수 조림은 18,729ha에 4,816만 그루, 주요 관광지 등에는 생활경관림 조성을 위해 3,402ha에 679만 그루를 심는 등 총 22,131ha에 5,495만 그루의 나무를 전국에 심었다.

또한 새천년을 상징할 수 있는 느티나무를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하고 밀레니엄 숲을 조성하여 느티나무가 갖고 있는 국가발전, 지역화합, 통일 등의 상징성을 전파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새천년을 맞아 나무심기에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국민 내나무갓기 캠페인을 농림부·산림청·조선일보 공동주최로 전개하였다.

새천년 첫해 나무심기행사를 남북통일과 안녕, 화합과 풍요를 상징하는 축제형식(祝祭形式)으로 추진하면서, 3월초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원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특색(특색)있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 「한라 생태숲」 조성(제주), 「새천년손자숲」 조성(충북), 「희망의 숲」 조성(서울시), 「미래의 숲」 조성(강원) 등

산지(山地) 뿐만 아니라, 도시, 산업단지, 학교, 마을, 거리 등 생활주변에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거리, 마을, 학교숲 조성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96년도에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을 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인 송이산 복원조림을 완료하고, 인가주변,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는 조기녹화를 위해 큰나무를 심어 경관숲이 조성되도록 함은 물론, 내륙산간 지역에는 상수리나무, 잣나무 등 경제수를 심어 산림자원 조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봄에 발생한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도 생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복구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다.

육림사업은 생산임지 중심의 대단위 권역을 설정하여 149천ha를 지역 완결 위주로 실행하고 있으며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사업 등의 작업 중에 따라 생육 단계별로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고급 우량 대경재생산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IMF실업자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98. 5월부터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예산과 노동력 부족으로 가꾸지 못한 우리나라 숲을 ('99까지 173천ha, 2000계획 107천ha) 체계적으로 가꾸어 줌으로써 숲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고 실직자('99까지 632만명, 2000계획 42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정부실업대책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은 민간단체, 기업과 정부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추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단위로 발족된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에서는 농·소·정 협력사업으로 숲에 대한 이해를 돕는 녹색산촌체험과 숲 가꾸기 1일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도시민들이 좀 더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숲가꾸기의 중요성과 숲의 혜택을 널리 파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산림자원관리 기반조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할 목적으로 임내(林內)에 시설하는 임도는 과거에는 단순히 임산물을 운반하는 운반로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임산물의 운반 뿐만 아니라, 조림·육림·임목생산 등 산림작업을 기계화하고 원목 등 각종 임산물의 수송을 원활히 하며,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오지 산림의 개발과 이용이 불가했던 유익자원의

활용을 높일수 있는 등 산림경영을 성력화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하는 임업경영에 있어서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또한, 농산촌의 단위 마을간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익성 임간도로이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를 확대 시설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는 총 사업비 69,190백만원을 투자하여 915km를 시설하였고, 2000년에는 총 54,125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413km와 지금까지 시설된 임도의 개선을 위해 구조개량 150km, 유지보수 2,514km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말까지 시설된 임도의 거리는 총 14,432km로서 ha당 임도밀도는 2.3m에 이르나, 일본 5m/ha, 미국 10m/ha, 독일 40m/ha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산간오지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얻기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비록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숲 가꾸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인력에 의존한 산림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즉 노동의 안전성과 효율성, 적시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와 기능인력 확보방안의 임업정책과 능률적인 경영방법의 개선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산림경영 여건상 적극적으로 기계화를 추진하기에는 작업공간의 지리적인 여건, 열악한 자원분포, 임도의 미비, 전문 기술인력 부족 등이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임업기계화는 미래의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이며, 이에 더하여 점점 더 높아지는 노동임금, 외채도입여건의 악화, 안정적인 목재공급에 대한 수요증대, 영급·축적 등 점차 개선될 산림자원 구조 등은 높은 수준의 기계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노동절약형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5년부터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에도모해 오고 있는 반면,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도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기계화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기능인 양성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관리·운영체계,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밤 수집기, 자동수간 주사기, 식재기 등 21종의 임업기계·장비가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원목운반용 미니포워드, 굴삭기를 이용한 벌채목 수집기기 등 각종 기계·장비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9년말 현재까지 지방산림관리청 7,006대(21%), 지방자치단체 12,269(36%), 임협 14,387대(43%)의 기계·장비가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산림관리청 별로 기계화시범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임업기계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파급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07년까지 336,387백만원을 투입하여 149,624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나. 임업경영기반 확충

(1) 사유림 경영 활성화

전체 산림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는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진흥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최종수확까지 50년 이상 소요되는 산림투자의 장기성·저수익성 및 소유규모의 영세성 등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산주의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에서도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산림분야 투자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산림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영세한 산주에게는 임지규모화를 통하여 임업경쟁력을 갖도록 협업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협업경영은 자발적으로 임지를 집단화하고 단지화된 공동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단지내에서는 시설, 생산, 시업, 판매활동을 모두 공동협업으로 하기 위하여 1999년 말 현재 247개 협업체가 조직되어 있다.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협업지도원 85명을 배치하여 인건비 80%, 운영비 100% 및 산림사업비(자부담비의 30%)를 지원하였으며, 협업체 공동 소득사업으로 24개소에 33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기자본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 실행해 주는 대리경영제도를 도입하여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다. 금년도 대리경영 계약실적은 94천ha(계획 50천ha)로서 향후 부재산주 산림등 방치되고 있는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유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이 크게 증진될 것이다.

산림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독립가·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유림경영의 핵심선도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독립가는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임지규모를 가졌거나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15명을 선정하여 현재 총 351명이 선정되어 있다. 임업후계자는 임업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임업경영의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1999년 158명이 선정되어 현재 총 711명이 선정되어 있다. 독립가·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산림경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행정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사유림의 경영주체 육성과 함께 기술보급·경영지도 등 기술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국내의 선진임업기술·지식·정보의 보급과 현장위주 경영지도로 산주의 산림경영지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산림조합에 임업기술지도원을 배치하여 임업기술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산림조합에 배치되어 있는 임업기술지도원은 총 787명으로서 임업기술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지도원 인건비,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단기소득임산물 개발·지원

다양한 임산자원의 소득화 촉진과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소득 품목인 밤·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고, 매년 85백만\$ 정도를 수출하는 밤의 경우는 우수품종 개발 보급, 노령목 갱신, 병해충 방제 및 방제장비 지원, 작업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표고의 생산체계를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표고자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 및 벌채구역 지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 조경수, 분재, 야생화·난 등 관상자원과 산약초·약용수종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량증식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로 우리 토종식물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확대와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지원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임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이면서도 세계6위의 목재 수입국으로서 연간 26백만m³(원목6,623m³)의 목재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150만m³의 국산재를 재질과 특성·용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국내 목제품 공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목재가공 산업의 생산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자동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간벌·소경재 등 국산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목제품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하여 목탄·목초액, 통나무가공, 제재목, 칩 등 37개 목재가공 시설에 대한 신·증설 및 노후시설 교체 등 현대화·자동화 시설지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국산재 대량 수요처이면서 폐목재 재활용으로 21C 환경 친화적 목제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MDF, PB 등 보드류 제품을 생산하는 각 시설개체와 공정의 자동화 시설에 대한 시설자금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건설·가구산업의 경기위축으로 재고 누적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가공 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원목 구입자금 8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농산물의 증수 및 품질향상, 병해충 발생억제, 토양개량 등에 효과가 인정되어 국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목탄·목초액 산업육성을 위하여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한 바 있으며, 친환경 농자재로 확대·보급 할 수 있도록 신규 시설자금 지원확대와 각종 농작물에 미치는 성능효과

에 대한 연구용역과 산업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밤, 표고 등 식용임산물의 가공산업 육성과 축산 폐수정화용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시설자금 등 관련산업에 육성지원 할 계획이다.

(4) 산촌 종합개발

우리나라의 산촌은 국토 면적의 46%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국토 공간상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주공간으로서 농림업의 생산기반이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핵심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여건이 유리한 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산촌은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전락되었으며, 농어촌 또는 오지

개발사업 등 정부의 투자 우선 순위에서도 소외되어 산업기반이나 생활환경정비 수준이 낮고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산촌 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촌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어 산림청에서는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낙후된 산촌지역을 산림경영과 임업진흥을 위한 중심 마을로 육성하므로서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도시민에게는 보건 휴양장소로 제공하는 도농간의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95년부터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끝나는 2007년까지 240개 마을을 목표로 현재까지 9개 마을을 완료하고 67개 마을은 개발 조성 중(17개 마을 설계 포함)에 있다.

주요사업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의 신·개축,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시설, 마을회관, 마을안길 정비 등의 정주기반조성사업과 소득원개발을 위한 공동저장·판매, 이용가공시설, 산나물, 산지과수, 관상수 재배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산촌개발을 통하여 산촌지역의 진흥은 물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마을로 육성, 나아가 지역 임업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임업 기능인력 양성

산촌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산림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업기능인 중·장기양성계획』에 따라 영림단을 연차별로 조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신규로 38개단 510명을 조직토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규 조직된 영림단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장비지원으로 8종 1,200점, 56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임업기능인 교육·훈련은 현장위주로 하여 교육과정별(신규, 보수, 순회) 차별화를 도모하고, 임업기계의 운전조작기술 및 점검·정비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직업으로서 영림단 임업기능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충분한 작업물량 확보와 시기별 적정 배분토록 하고 친목(상조)회 운영을 통한 구성원간의 결속력 강화 및 복지증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3주 이하의 단기 기능인력 양성에 치중하였으나, 산림 작업을 감독·관리하고, 산림경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현장 임업전문가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 중·장기 『산림경영관리자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3개월 3기 15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6) 산림 복합경영 육성 및 지원

산림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이나, 임업은 목재생산의 장기성·저 수익성과 산림의 소유 규모가 영세하여 산업기반으로서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므로 목재 중심적 산림경영의 한계성을 보완하여, 다양한 임산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3개 유형의 『산림복합경영』 모델을 개발·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18개소에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복합경영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모니터링하여 이론·정책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7) 산림 휴양시설의 확충 및 운영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산업화로 산림에 대한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친화적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에게는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주와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99까지(국·공유림): 75개소→ 2000 : 3개소 → 2007년까지 115개소)과 산림욕장('99까지: 43개소→ 2000 : 10개소→2007년까지 83개소)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존 휴양시설의 내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연휴양림 고유 이미지 확보를 위한 이미지 통합사업(CIP)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국민의 건전한 자연학습·휴양활동을 위한 산림체험코스 등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신규조성사업은 산촌종합개발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을 민박, 향토음식점 등으로 육성하는 등 산촌주민 소득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용토지의 부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최근 우량 농지의 타용도 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쌀 자급기반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농지의 전용을 대체하는 산지의 활용을 요구되고 있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산업화로 인하여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녹색공간 등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환경·휴양기능의 증진을 위한 산림의 보전도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임산자원의 빈약으로 목재자급도가 현재 6%에 불과하고 1999년도 목재 등 임산물 수입액이 1,521백만\$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우리 산림의 임업 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생산임지의 보전도 중요하다.

산지를 둘러싼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전할 산림은 보전하고 이용·개발할 산림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산림보전과 개발을 조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전임지는 가급적 보전하고 새로운 토지이용수요는 준보전임지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준보전임지의 활용촉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1999. 8. 6일부터 총 사업 부지면적 중 준보전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둘째, 준보전임지에 대한 신고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대상을 확대하였다. 1만제곱미터 이내로 산채·약초·특용작물·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토록 하였다.

보전임지는 가급적 산림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보전임지는 전체산림의 77%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이고 보전·준보전임지로 구분할 때 개발예정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용·산업용 시설이나 시설 성격상 보전임지에 입지가 불가피한 것은 전용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1999. 2. 26일 산림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대상을 추가하였다. 생산임지 안에서 화장장·납골당과 종교시설의 개축·증축을 허용하였으며 공익임지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라. 임산물 이용기술 개발·보급

국산 침엽수재를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제조기술을 개발, 낙엽송 집성구조물로 산림과학관을 축조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개발한 기술을 관련업계에 보급하므로써 국산 낙엽송재를 이용한 집성 구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낙엽송의 이용확대는 물론 구조용 집성재 수입 대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목질칩을 이용한 축산분뇨 처리용 정화조를 개발하여 폐자원으로 생산되는 목질칩을 축산 농가의 돈분뇨 처리용 정화조의 충전제로 이용하므로써 임산자원의 새로운 용도개발 및 축산농가의 난제 해결이 기대된다.

임업기계화를 위하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5t 상용트럭을 이용하여 벌목·집재작업원 4인 1조로 하여 1일 16~23m³을 수집·집재할 수 있는 다목적 집재작업차를 개발하여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했다.

그리고 표고버섯 종균 접종용으로 다양한 모델의 성형종구 제조기를 저렴한

하고 사용이 간편하도록 농가형으로 개발하여 재배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대량 생산용 자동화 제조기를 개발함으로써 종균배양소, 표고 생산자조합 또는 산림조합 등에서 다수의 재배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표고종균 성형종구를 단기간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표고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표고종균의 성형종구 접종법은 과거보다 접종비를 4배나 절약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재배자 대부분이 성형종구로 접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가시없는 음나무와 개화기간이 긴 수양겍벗나무 신품종을 연구 개발하였다.

마. 해외 임업협력 증진

(1) 해외 조림 확대

목재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산림자원 외교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산림자원보유국인 7개 국가와 임업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통해 양자간의 임업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국(6월), 몽골(8월)과 임업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얀마, 베트남과의 임업협력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과의 임업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국제협력단의 후원으로 11개국 16명의 산림공무원을 초청하여 산림경영 연수를 실시(6월)하였으며, 미얀마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인도네시아 소경재 이용사업 및 대규모 중국 조림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는 지난 '99. 8월 우리나라가 사막화방지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양자간 협력사업 등을 가능한 동협약체제 내로 수용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안정적 목재공급원을 확보하는 한편 '92년 리우선언 이후 강화되고 있는 환경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아 탄소배출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해외조림사업은 향후 사업 자체의 투자수익과 더불어 기업의 환경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는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 산림사업과 무관한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프랑스의 푸조 자동차회사도 이미 해외조림에 착수하였고 이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해외조림 확대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2000년도에는 용자규모를 확대('98 : 65억원 → '99 : 91억원 → 2000 : 132억원)하는 한편 참여업체 자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의 100%를 용자 지원하고 있다.

(2) 임산물 수출입

임산물 수출은 합판산업을 중심으로 한 때 국가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90년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 특히, 주요 경쟁국인 중국산의 약진은 우리 임산물의 수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품질 제고, 우리 상품의 우수성홍보, 신규시장개척 및 신규품목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현재 임산물수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시책과 수출업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감소세를 지속해오던 임산물 수출이 '99년에는 '98년보다 11%증가한 2억6천3백만\$을 기록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14%늘어난 3억\$을 수출목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구조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99년을 기준으로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일본, 중국, 미국, 홍콩, 영국 등 상위 5개국에 전체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밤, 송이, 표고 등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대일 의존도는 92%에 달하고 있고 품목에 있어서도 밤, 합판, 송이, 섬유판, 마루판, 표고 등 상위 6개 품목이 전체수출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장다변화와 품목확대를 위하여 '99년에 해외시장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세한 임산물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포장·운송비, 포장기계·운송차량, 선별기 구매비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에 올해 58억원('99

년 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물류비의 경우 지원금액과 품목을 크게 늘렸으며 신규시장을 개척하거나 유리한 가격으로 수출을 늘릴 경우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출촉진자금지원이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기회를 갖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수출에 대한 자신감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연 2회 (2000년 대만·홍콩, 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한·일 밤 간담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한편,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용 원료구매자금으로서 올해 422억원(지난해 385억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업체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품목별 간담회 개최, 수출전담연구팀 현지 확인, 수출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밤 수출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이었던 밤 검역체계의 개선을 위해 미국인 현지 검역관을 공주, 부여 등 밤 주산단지로 초빙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IMF 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임산물 수입은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수입이 증가하여 올해는 IMF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목재류는 중간재, 원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 임산물수출에 대해서는 국내 임산업의 기반이 최대한 유지·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합판·표고버섯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국내시장 장악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수출업체나 국가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 등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5. 수산업

연근해어업

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업은 최근들어 어업자원의 감소, 주변국가의 EEZ선포, 해양오염 심화 등 주변의 어업환경 변화와 IMF의 영향으로 인한 어업경비의 증가로 대부분 어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업환경변화에 맞도록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보완발전 시키는 등 개혁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사업을 국정 100대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안어업은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역실정과 어업자원 수준에 맞게 허가정수 조정 등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근해어업은 EEZ확정시 영향이 크거나 어업경쟁력이 저하된 대형선망, 대형트롤, 대형기저(외끌이,쌍끌이),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채낚기, 근해안강망, 근해유자망 등 8개 업종을 위주로 우선 감척해 나가고 또한 경쟁력이 열위인 업종에 대하여도 감척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이와 별도로 유사업종 통폐합 등 어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자율관리 어업정착 등 어업자원관리를 강화하여 연근해 어업 자원을 보전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99년도에는 '99.9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영향받는 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낭장망, 안강망 등 연안어업의 감척은 실시하지 않고 동 협정과 관련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형기저 외끌이(16척), 대형기저 쌍끌이(86척), 대형트롤(23척), 근해채낚기(201척), 근해 통발(151척), 근해유자망(99척), 근해연승(61척) 운반선 31척 등 668척을 감척 추

진중이며 한·일 어업협정 관련 영향이 없는 어선은 “일반감척사업”으로 근해 안강망(71척), 대형선망(6척) 등을 감척하였다.

2000년도에는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결과를 감안하여 특별법에 따라 33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감척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일반감척사업으로 연안어업 48척, 근해안강망 45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나. 주변수역 자원보호 및 관리강화

UN해양법 발효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EEZ선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EEZ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등에 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제정, '97.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자원전문가 협의회 구성과 한일 수산자원조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99년까지 4,253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43천ha를 시설하였고, '99년에도 450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시설중에 있으며, '94년부터 대단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7개소 시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99년까지 5개소를 준공하고 2000년 현재 2개소는 공사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어장 자원조성의 가속화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한 수산종묘 293백만마리를 '86년부터 매입하여 연안어장에 방류하였다

불법어업 근절로 어업질서를 조기 정착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검찰, 경찰, 해경, 시도, 수협 등 관계부처와 공조체제를 구축, 불법어업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상습·고질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벌금 상향조정, 구속수사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불법어선에 대하여 '98년까지 247억원을 지원 2,558척을 합법어업으로 전업 조치하였고, '99년에도 33억원(330여척)을 지원하고 있는 등 불법어업 조절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다. 어로시설의 현대화

'99년에는 연근해어선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조업을 위하여 노후어선, 기관대체 및 어선장비·설비개량 등에 293억원을 지원하여, 16~21년 이상의 노후어선 1,521톤을 대체 건조하고 연료과다소모형 저효율 기관 30천마력과 노후된 어선 74척의 장비·설비를 개량하였으며, 어선용 기계 1,271대를 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였다.

해면양식어업

'99년도 해면양식어업은 원양 및 연근해 어선어업 생산여건 악화로 감산이 예상되는 수산물을 양식어업 육성을 통하여 보전 생산하고자 새로운 양식어장을 확대개발하고 양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생산 기반 조성 과 양식어업 경영안정에 주력하였다.

고급 수산물 증산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양식어장 개발은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과 관광 등이 연계된 양식단지 4개소를 조성하고, 어류양식장 19개소와 내파성가두리양식장 4개소, 전복·가리비 등 고소득 양식어장 80ha를 새로이 개발하여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230ha의 마을어장을 생산성이 높은 양식어장으로 개발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지선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또한 양식기반 확립을 통한 양식어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양식어업 기반시설에 총 사업비 107억원을 투자하여 어·패류 종묘생산 시설 9개소, 사료저장시설 10개소, 사료제조기 11대, 개량부자 247천개 등을 지원중이다.

그리고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연 1회 이상 전 어업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리 어업권을 정비하고, 새로운 양식품종 및 기술 보급과 어장의 단위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어촌에

상주하고 있는 수산기술관리공무원을 활용, 적정시설 지도와 함께 어장에
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양식어장 평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악화되고 있는 어장환경을 개선·보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총 사
업비 223억원을 투자하여 어장바닥갈이, 오·폐물수거 등 어장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내수면양식어업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의해 가두리양식장 철거 등 내수면 어업입지
약화에 따른 어업인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담수어 집약생산시설 확충, 고
부가가치 지역특산어종 개발 등 양어장 시설지원을 위해 대단위 담수어양식
단지조성 및 담수어양어장 시설을 '99년도에 4,200백만원(21개소) 지원에 이어
2000년도에는 2,100백만원(11개소)를 확보하여 지원하므로서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 도모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원양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조치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과 베링공해, 북대서양수
산기구(NAFO)수역 등의 주요어장이 상실되고,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
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
에서는 원양정책자금을 2000년에 4,670억원(영어자금 1,150, 생산자금 3,520)
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간 어업협정을 통해 양자간 어업협력관계를 유지
해 오고 있는 연안국들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자원을
보유한 기니아, 세이셸 등과도 새로운 어업협력을 통하여 해외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입어대상국 등을 대상으로 현지투자·합작 등 상호 호혜적 입어를 적극 추진하여 장기적인 해외어장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주요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강화로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어업규제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원양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99년도에는 북해도 트롤어선 6척을 감척 완료하였으며, 2000년에 꽁치붕수망 어선 4척을 감척하고자 47억을 확보하여 감척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에는 북해도 수역내 꽁치붕수망 3척을 감척하고자 예산 35억을 확보하였다.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다양한 소득원 개발

가.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농촌지역에 농외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높여주고,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1984년부터 농공단지 조성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6월말까지 총 295개소의 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이중 286개소의 농공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었고,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에 3,054개의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며, 100천명이 취업(현지인 67천명)하여 연간 8,530억원('98년기준)의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은 고용증대와 생활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외에 단지 조성공사와 공장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촉진, 지역연고기업의 투자활성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 농공단지 조성실적 >

구 분	합 계	'96년 까지	'97년	'98년	'99~2000년
단 지 수(개소)	295	286	5	3	1
연 면 적(천평)	13,436	12,995	294	103	44

나. 농촌휴양자원개발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농원은 '84년, 휴양단지는 '89년, 민박마을은 '9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84년부터 '99년 말까지 국고융자 1,602억원을 지원하여 639개소(관광농원 379, 휴양단지 8, 민박마을 252)를 조성하였으며, 2000년에는 47억원을 지원하여 15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고 있다.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의 '99년 한해동안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관광농원 등에 다녀간 내방객이 500만명(관광농원 420만명, 휴양단지 30만명, 민박마을 50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도·농교류의 매개체로서 역할과 인근지역의 농특산물 판매확대 등 농촌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다. 한계농지 개발 추진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지역여건을 감안, 다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94.12월 농어촌정비법을 제정. '95. 6월에 시행함으로써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99년말까지 4개소를 완료하고 2000년도에는 1개소(계속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라. 어촌관광 개발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의 소득원 개발, 어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90~'96년까지 67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7년부터는 안정적인 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개소당 30억원씩 2개년사업으로 투자하는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전남 보성군에 30억원을 투자하여 해수·녹차탕을 증축 운영 중에 있다.

또한, '98년부터는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

을 마련코자 2004년까지 7개지역에 개소당 60억원씩 3개년사업으로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까지 전남 완도(20억원), 경남 거제(10억원), 강원 삼척(10억원) 등 3개지역에 국비 40억원을 지원하여 2001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업인·어촌을 활성화하고 어촌관광산업화를 위한 모델개발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어업활동의 장(場)인 어촌을 어로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해양레포츠, 바다낚시 등 체험관광어촌으로 개발하여 21C 관광어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준비중에 있다.

이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자원, 산업생산과 연계하여 도시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착문화적, 환경친화적 관광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5개마을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독창성이 있는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1개마을당 20억원을 투자하여 체험어장, 진입도로, 민박시설, 주차장, 휴게시설 등 체험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관광어촌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마. 어업의 소득원개발 지원

어업의 소득원개발사업은 그동안 산업화에 따른 바다의 매립, 간척과 연안어장 오염심화 등으로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국제적인 자원의 자국화정책 등 어려운 수산업의 여건으로 어가소득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농가소득 대비 '97년도 87%수준) 어촌경제를 활성화시켜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1994년부터 관광·부업시설, 복지시설 등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98년까지 411억원을 투입하여 낚시터, 유람선, 체험어장, 활어회센터, 민박시설, 공동목욕탕 등 10여종의 어촌부업·복지시설을 130개소 지원 완료 하였으며, '99년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18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현대적 생활환경을 갖춘 문화마을 조성

면 지역의 중심마을에 마을기반시설, 주택신축, 복지·문화 및 환경보전 시설 등을 갖추어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가면서 생산기반, 유통, 가공시설사업과도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91년부터 '99년까지 115개 지구를 착수하여 94개 지구를 완료하고, 2000년에는 699원을 들여 23개 지구를 신규로 착수하여 13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10년간 4조원 지원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정주기반조성을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4조원을 지원하여 매년 25천호씩 25만호를 개량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99년까지 16,060억원을 지원하여 95,400동을 개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550억원을 지원하여 7,750동의 주택개량을 추진중에 있다. '98년부터 IMF 영향으로 인한 정부예산 지원의 감소로 당초 계획된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어촌주택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소요액	'95까지	'96	'97	'98	'99	2000	2001이후
농어촌주택개량 (농특세)	40,000 (8,000)	4,000 (1,200)	4,000 (800)	4,000 (800)	2,020 (680)	2,040 (408)	1,550 (388)	18,390 (3,724)

다.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추진

지방양여금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제정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94년 7월 ~ 2004년 6월말까지 10년간 농어촌지역에 투자되는 농어촌특별세 총 15조 원 중 1조 2천억원을 농어촌도로에 투자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당초 2004년까지 3조 2,210억원(지방양여금 2조 630억원, 지방비 1조 4,210억원을 투자, 17,168km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여 포장률을 '99년말 28.4%에서 2004년까지 45% 수준으로 신장할 계획이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94~2004년)>

사업명	합계	'94~'97	'98	'99	2000	2001~2004
사업량(km)	17,168	4,749	766	517	599	10,537
사업비(억원)	44,210	13,513	3,672	3,580	4,223	19,222

※ 재원별(억원) : 농특세 1조 2,000억원, 양여금 2조 630억원, 지방비 1조 1,580억원

라.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

상수원 오염과 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도 도시지역 주민과 같이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94~2004)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광역 상수도 및 지방상수도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자연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여 '99년까지 총 3,932억원을 투자하여 2,65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2000년도에는 722억원을 투자하여 425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하여 총 5,000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99년까지 총 1,174억원을 투자하여 9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0년도에는 총 238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9개소를 포함하여 50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하여 2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농어촌의 생활하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95~'99년까지 1,062개 마을에 1,854억원을 지원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2000년에는 389억원을 지원하여 170개 마을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95~'99년까지 오염소하천 260km를 정비하였으며, 2000년에는 207억원을 투입하여 52km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대 등으로 광역매립지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을 연계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95~2004)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에는 신규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앞으로 2004년까지 총 2,040억원을 투자하여 79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소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8년부터 '99년까지 534억원을 투자하여 89개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바 있고, 2000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증설 포함)를 추진중이며, 앞으로 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종합대책('96~2005)에 따라 4개소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상수원 및 하천주변에 밀집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91년부터 2000년까지 2,868억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중에서 설계유입수질보다 실제 유입농도가 높거나, 질소·인 처리시설 등이 미흡한 27개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을 축산폐수공공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축산분뇨분리저장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폐수의 수거·운반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특세 생활여건 개선분야 사업내용>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관부처	총 소요액	'94	'95	'96	'97	'98	'99	2000 계획	2001 이후	개발목표
○농어촌도로	행정자치부	12,000	650	1,200	1,200	1,000	840	759	1,089	5,262	○농어촌도로 17,168km확·포장
○농어촌주택	행정자치부	8,000	400	800	800	800	680	408	388	3,724	○농어촌주택 25만호개발
○농촌생활용수		12,000	400	1,200	1,200	1,200	1,106	1,174	1,198	4,522	
- 암반지하수	농림부	8,500	130	800	800	800	680	722	722	3,846	암반관정 5,000개소 개발
- 지방상수도	환경부	4,000	135	200	200	200	226	226	238	2,588	면지역 215개소 설치
○농어촌하수처리사업		8,100	-	800	750	700	560	506	726	4,058	
- 마을하수도정비	행정자치부	5,000	-	450	413	375	291	247	389	2,835	
- 면단위하수도정비	환경부	1,100	-	150	137	125	97	83	130	378	농어촌마을 2,500개 정비
- 오염소하천정비	행정자치부	2,000	-	200	200	200	172	176	207	845	농어촌소하천 1,000km정비
○농어촌폐기물종합 처리시설비지원	환경부	2,040	-	225	225	225	150	150	150	915	○79개소 (시·군당 1개소)
계		41,640	1,315	4,025	3,975	3,725	3,123	2,771	3,313	20,393	

※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총예산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포함

※ 지방비 제외 (국비중 양여금 포함)

3. 교육여건 개선

가. 농어촌학생 대학입학기회 확대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례입학 확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촌 대책의 일환으로, '96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한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제는 농어민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을 방지하는 등 농어촌 육성·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학생 등의 대학입학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원의 선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을 '96년 입학정원의 2%에서 '97학년도부터 3%로 확대하였고, 대상 범위를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생은 물론 재학 중 읍·면·이·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여 농어민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였다.

- '96 : 총 265개 대학 8,967명 입학
- '97 : 총 300개 대학 14,127명 입학
- '98 : 총 313개 대학 16,017명 입학
- '99 : 총 326개 대학 15,185명 입학
- 2000 : 총 332개 대학 15,820명 입학
- 2001 : 총 337개 대학 18,946명 선발 예정

(대학 : 179개 대학 10,156명, 전문대 158교 8,790명)

(2) 농어촌지역에 전문대학 설립

농어촌지역의 전문대학 설립요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고교를 개편, 8개 공립전문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여, 거창·남해 전문대학은 '96년에, 경도대학은 '97년에, 강원전문대학·충북과학대학·청양대학·담양전문대학을 '98년에 개교하였고, 남도대학은 '99년에 개교하였다.

나. 농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1) 공립학교 수업료, 입학금 면제범위 확대

농어촌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94. 8월 교육부령인 『학교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읍·면, 도서·벽지 소재 공립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범위를 15%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부모가 읍·면지역 및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 10,000 m²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중 실업계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에 의하여 1990~1999년까지 4,729억원(1,293천명)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502억원(84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핵심 농업인후계세대 육성, 자영농과생의 기숙사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 고취, 농업인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지원계획을 확정('85.2.21)하여 1986~1999년까지 105억원(20천명)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9억원(2,82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새마을장학금 지원

농업계고교 재학생 중 자영농과생 및 일반농과생 중 영농학생이나 4-H회원을 우선 선발,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2,500명에게 4억원(1인당 1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00년도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지원계획 >

구 분	실업고생 학자금	자영농과생 급식비	새마을장학금
인 원	84천명	2,822명	2,500명
금 액	502억원	19억원	4억원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기존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과 병행하여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2,1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학기 당 1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융자금의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된 다음달부터 융자받은 기간의 2배 기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등상환 하도록 하고, '99년에는 2만 명에 대하여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라. 농어촌 출신 학생 기숙사 건립

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 숙식비 절감, 면학분위기 조성과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1995년부터 각 도(道) 단위 1개소(9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건립규모는 연건평 2,000평 규모로 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관,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출신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도모하게 될 것이다.

1999년도까지 경북, 경남, 충북, 전북, 전남 등 5개소는 개원·운영 중에 있고, 충남·제주는 건립중이며, 경기 및 강원도는 부지확보 등 자체 사정을 감안,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

마.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농어촌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각종문화 및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토록 하여 농어촌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1995~2004년까지 총 100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1995~1999년까지 38개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총 100억원의 장서구입비 지원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1995~1999년까지 805관에 50억원을 지원하였다.

2000년도에는 4개관 도서관에 건립비 각 10억원씩 40억원을 지원하고 도서 구입비로 179관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농어업인 연금제도 실시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WTO체제출범 및 UR 등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통상압력 강화 등으로 농업인의 노후 생계보장과 노령 농업인 등의 은퇴후 소득보장 제도로써 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내에 국민연금을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94. 6월 농어업인 연금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95. 7.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시행 성과

농어업인연금제는 '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2000년 7월말 현재 가입자수는 210만명(농업인 67, 비농업인 75, 납부예외자 68)으로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농어업인연금제도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부과, 급여체계를 적용하되,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95년 시행당시 60세이상 65세미만의 노령 농어업인에게 한시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하여 83천명이 가입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2,940원을 매월 지급하고, 관리운영비 전액을 농어촌 특별세 재원으로 2004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농어업인연금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총소요액	'95	'96	'97	'98	'99	2000이후
8,000	455	598	696	616	579	5,056

한편 효도연금보내기 운동을 사회운동 차원으로 적극 전개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농촌에 계신 부모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토록 유도함으로써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모봉양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2000.7월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확대시행 만 5년이 됨으로써 8월부터 188,767명(17,626백만원)이 추가로 특례노령연금 수급혜택을 보고 있다.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농어업인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자진납부 등의 연금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므로 특례노령 등에 대한 연금 급여 혜택, 유족·장애연금 등의 연금수급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제도, 선납제도, 분기납제도 등의 납부편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월 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중이다.

5.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부담경감

소득형태, 소득과약률, 의료이용률이 유사한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험제도는 조합내에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원활한 재원조달, 조합별 책임경영 및 조합간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조합간에 연령별 인구구성, 조합간 재정력 격차 발생, 일부 소규모 조합의 경우 위험분산 기능이나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미흡하여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고 퇴직, 거주지이전 등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경우 조합간 자격관리가 연계되지 않아 누락자 및 이중자격자가 생기는 문제 등의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되었고, 2000년 7월 1일에는 139개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조합별로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보험료 부과체제로 변경하여 고소득층이 더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하도록 하였다. 특히,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산정된 보험료의 15%를 경감하였고, 도서·벽지 지역주민에게는 보험료의 50%를, 노인단독세대·소년소녀가장세대·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 ~ 30%를 경감토록 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

(2)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들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액 경감연령을 종전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3) 건강검진 실시 및 급여기간 연장

농업인 등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험급여 확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세대주 및 40세 이상인 세대원에 대하여 '95년부터 당뇨, 고혈압, 간기능장애 등 성인병에 대해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98년 10월 1일부터 매 30일간의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액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보험급여기간을 '98년 300일에서 '99년 330일로 연장하였으며, 2000년에는 급여기간 제한없이 연중 급여를 받게 되었다.

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농어촌 도·농 복합형시를 포함한 군단위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및 산하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보건기관의 기능보강을 위한 진료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산간오지·벽지 등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의 진료 기능강화 및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공중보건한의사제도 도입

농어촌지역에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한의사제도를 도입하여 '98년에는 10명, '99년에는 60명, 2000년에는 21명의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0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0년 12월 일 발행

2000년 12월 일 인쇄

발행 : 대한민국정부

편집 : 농림부 농업정책과

인쇄 :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비매품>